

# 工業化 速度에 대한 世界市場 規模의 影響

俞 正 鎬

(本院 先任研究委員)

---

\* 草稿에 대한 本院의 韓震熙 박사와 高麗大의 李鍾和 교수의 논평은 이 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두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원내 세미나에서 도움의 말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통계자료 정리, 회귀분석, 그림 그리기에 도움을 주신 尹善暎 연구원께도 감사드린다.

◇ 要 約 ◇

19世紀 中盤에 시작된 先進國들의 工業化는 약 100년이 所要되었는데 東아시아 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後者の 工業化 경험은 흔히 ‘東아시아의 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高速成長 혹은 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나에 관해 經濟學界 內外에서 그리고 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政府의 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新古典 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價格歪曲의 最小化, 市場機構의 活用, 國際分業에의 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奇蹟’은 市場의 資源配分에 대한 政府介入이 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東아시아의 奇蹟’은 東아시아란 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世紀 後半에 일어난 同時代의 현상이기도 하다. 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世界市場과 활발히 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世界市場의 規模를 대표하는 世界總輸出이 19世紀 中盤과 20世紀 後半 사이에 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世界市場의 規模增大가 東아시아 NICs들의 高速成長의 理由였을 可能性을 理論적으로, 實證적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理論적으로는, A. Lewis의 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經濟에서는 世界市場 相對價格이 不變인 한 製造業內 勞動集約도가 높은 產業에 대한 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投資의 지속은 製造業部門의 產出과 雇傭이 經濟에서 점하는 比重을 낮은 資源費用으로 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工業化 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工業化를 시작하는 時點의 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工業化 所要期間이 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東아시아 NICs의 工業化 所要期間이 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世界總輸出 規模의 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理論的 根據와 實證的 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經濟는 政府 主導型이었으나 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政府主導보다는 그 規模가 대폭 증대한 世界市場에서의 國際分業이었다.

## I. 序 論

지난 30餘年間の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成長을 가리켜 ‘東아시아의 奇蹟’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들의 成長과 工業化의 速度가 사상 유례없이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高速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나에 관해 經濟學界 內外에서 그리고 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 政府의 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新古典 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價格歪曲의 最小化, 市場機構의 活用, 國際分業에의 參與에서 ‘東아시아 奇蹟’의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 데 비해, 소위 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奇蹟’은 政府의 介入이 奏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하튼, 政府役割에 대한 評價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經濟運營에 관하여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民間部門과 政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定立하느냐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 定立의 방향은 우리 社會가 무엇을 바람직한 政府의 役割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고, 바람직한 政府의 役割이 무엇이나에 관한 우리 社會의 見解는 과거 政府의 役割을 어떻게 評價하느냐에 따라 크게 左右될 것이다.

이 글은 政府의 役割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고 東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高速 成長과 工業化의 理由에 관한 것이지만, 이 글의 論議는 政府의 役割에 관해 매우 중요한 示唆를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이 成長 및 工業化를 史上 類例를 찾기 어렵게 빠른 速度로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자원배분에 대한 政府介入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先進國들이 工業化하던 時期에 비해 100배 가까이 커진 世界市場을 우리 經濟가 활용하였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 결론의 意義는 소위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부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戰略의 客體라 할 수 있는 世界市場의 크기가 工業化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그 동안 그 重要性이 간과되었던 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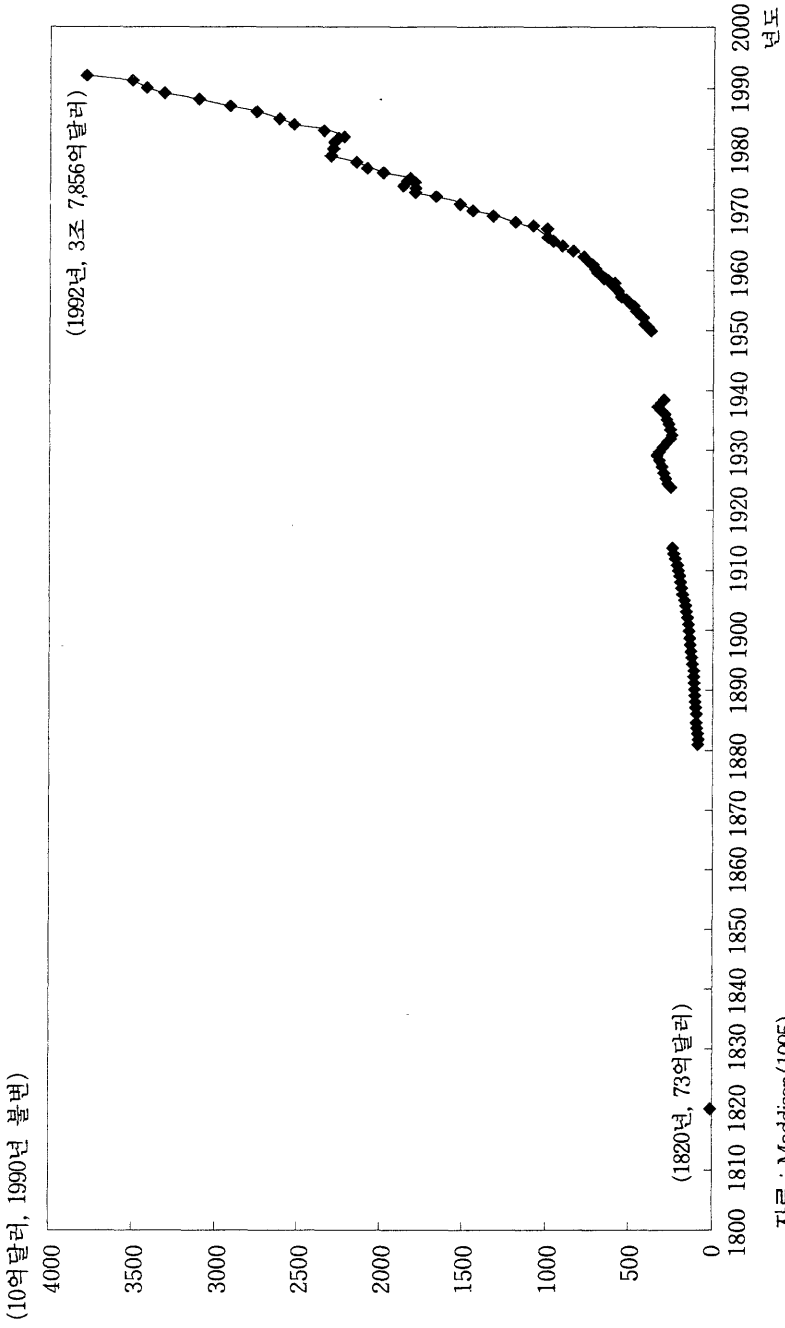
현재의 世界交易規模는 최초의 公업화라 할 수 있는 英國의 産業革命 당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820~1992년의 기간에 世界의 交易規模는 실질 기준으로 540餘倍로 커졌으며, 우리나라의 工業化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초의 世界交易規模는 1820년에 비해 약 100배 이상의 크기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sup>1)</sup>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世界市場이 한 經濟의 成長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놀랄 일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당시에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제 막 그러려 하는 南美나 西南亞 국가들처럼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戰略을 100년이나 200년 전에 택했다면 당시의 世界市場規模가 작았기 때문에 우리 經濟의 成長과 工業化가 지난 30餘年 동안 이루었던 것과 같은 高速이었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東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高速 成長 및 工業化가 가능하였던 것은 이들이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따랐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戰略의 客體였던 世界市場의 規模가 先進國들이 工業化하던 時期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政府役割에 대한 示唆가 도출된다. 우리 政府는

1) Angus Maddison(1995) 참조.

[그림 1] 世界 總輸出



자료 : Maddison(1995).

國防, 法執行, 市場失敗의 경우 公共財 供給 등 政府 本然의 役割도 遂行하였으나, 그외에도 市場의 資源配分 機能에 깊숙이 介入하여 왔다. 그런데 政府의 市場機能에 대한 介入은 불가피하게 私有財産 權 行使, 政治的 및 經濟的 自由, 競爭 등에 制限을 가하는 것이며, 만약 經濟成長이 그런 方法을 통해 加速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市場經濟의 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私有財産權, 自由, 競爭이 經濟成長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經濟의 高速成長이 政府의 市場介入보다는 世界市場과의 交流에 그 대부분의 이유가 있었다면 政府 本然의 役割을 넘어 市場機能에 介入하거나 制約하는 일은 처음부터 正當化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章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成長에 대한 新古典 經濟學 및 修正主義의 見解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經濟의 成長經驗에 비추어본다. 이 두 見解는 모두 世界市場의 크기가 工業化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III章에서는 세계시장의 크기가 ‘無限勞動供給’의 특성을 가진 開途國 經濟의 工業化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理論的인 論議를 전개하고, IV章에서는 世界市場의 크기와 工業化 速度와의 관계를 實證的으로 檢討한다. V章에서는 앞 章에서의 論議와 實證 分析의 結果를 요약하고 政府役割에 대한 示唆도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끝맺는다.

## II. 新古典 經濟學 및 修正主義 見解와 한국의 成長經驗

### 1. 2次大戰 이후의 經濟開發 處方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은 輸出增大를 통하여 高速成長을 이루었는데, 이는 2次大戰 이후 경제학자들이 내리고, 終戰後 많은 新生獨立國家들이 따라던 經濟開發 處方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의 開發經濟學이 내린 처방은 輸入代替를 통한 工業化 戰略인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아직 1930년대 大恐慌의 기억이 생생하던 당시 市場의 自律機能에 대한 不信이 깊었었고 開途國의 輸出 展望에 대해서는 悲觀論이 팽배해 있었다. 開途國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주로 農產物이라고 생각했는데 1次產出物의 交易條件이 크게 惡化되어왔었기 때문이다. 經濟學界에서 支配的인 위치를 굳혀가고 있던 케인즈 經濟學의 메시지는 市場에 대한 政府 介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소련 經濟의 急成長은 政府의 效率性에 대한 實證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 가운데 開途國에서는 價格 시그널이 作動하지 않고 經濟行爲는 非合理的이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 아래 開途國 政府가 家父長的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經濟成長을 이끌어가야 하고 그 방법은 輸入代替를 통한 工業化여야 한다는 데 별다른 異見이 없었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工業化 戰略이 초기에는 성공을 거

2) Krueger(1995)에 인용된 Srinivasan(forthcoming)이 인용한 「네루」의 말은 당시 지배적인 생각을 잘 보여준다: “어떤 근대국가도, 大規模 産業들만이 생

두는 듯하였으나 곧 인플레이 深化, 國際收支 赤字의 擴大, 農業部門의 失敗로 인한 食糧不足 등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sup>3)</sup>

이에 비해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成長經驗의 가장 두드러진 특장은 당시 開發經濟學의 처방과는 달리 輸出促進政策을 추진하였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詳論하듯이 우리나라 政府는 市場이 自律적으로 작동하도록 袖手傍觀하지 않았음은 물론 매우 적극적으로 經濟開發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었고, 홍콩을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政府의 市場介入은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經濟開發에 공통적 경험이었다.

## 2. 新古典 經濟學의 見解

新古典 經濟學은 序論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成長經驗을 價格歪曲의 最小化, 市場機構의 活用, 國際分業에의 參與를 통하여 한 나라의 經濟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新古典派의 입장은, 開途國의 特殊性 때문에 保護와 大規模投資를 통한 政府主導下의 製造業部門 育成이 經濟成長의 지름길이라고 보았던 당시 開發經濟學의 ‘誤謬’에 대한 하나의 反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價格機構가 作動하지 않거나 非合理的인 經濟行爲가 빈번한 것은 開途國의 國民性이 특수

---

산할 수 있는 필수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外國 經濟에의 屈從을 의미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弱點을 의미하며 아마도 政治的인 從屬까지도 의미할 것이다. 대규모 산업들은 장려되고 가능한 한 신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장려받을 산업의 종류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 經濟力의 礎石이 되어 그 바탕 위에 다른 산업들이 하나 둘 세워질 수 있는 기초적인 重工業이어야 한다. 電力開發은 公업성장의 前提이다. 기계, 조선, 화학, 기관차, 자동차 등등이 그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3) 2次大戰 이후 經濟開發의 경험에 대한 좀더 자세한 論議는 Krueger(1995) 참조.



하기 때문이 아니라 價格體系가 歪曲되어 있기 때문이라든지, 어느 나라건 資本이 不足하다 해서 比較優位가 있는 產業이 없을 수는 없다는 등등의 新古典 經濟學의 見解가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본 것이다.

新古典 經濟學의 見解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例는 ‘對外指向的(outward-oriented)’이라는 用語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이란 일반적으로 輸出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海外市場에의 進出을 통한 經濟開發을 뜻하는 데 비해, 新古典 經濟學에서는 輸出을 위한 生産과 國內市場을 위한 生産 사이에 어느 쪽으로도 偏倚가 없는 中立的인 貿易政策을 뜻하는 用語로 쓰이고 있다. 또한 產業活動에 관한 無差別을 의미한다. 輸入代替를 통한 工業化戰略과 비교하자면, ‘對外指向’은 어느 商品 혹은 產業을 差別함이 없이 모두에게 均等한 誘因을 주는 것을 뜻하는 데 비해 ‘輸入代替’는 商品 혹은 產業들에 따라 實效保護가 다르게 주어짐을 뜻한다.<sup>4)</sup>

### 3. 修正主義 見解

이러한 新古典 立場에 다시 反論을 제기한 것이 修正主義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東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工業化過程에서 資源配分이 市場機構의 작동에 맡겨졌었던 것이 아니라 政府가 깊이 介入하였다는 사실을 重視하고, 換率, 金利, 賃金 등 중요한 價格의 決定과 投資配분에 政府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하였던 것이 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빼어놓을 수 없는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것이 新興工業國 工業化에서의 政府의 役割에 관한 修正

4) 上揭 論文, p. 2518 참조.

5)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에서의 政府의 市場介入에 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Rodrik(1995a) 참조.

主義의 중요한 결론이지만 그 主張은 學者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근거로 삼는 論理도 같지 않다. 이 節에서는 修正主義를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그 見解를 살펴본다.

大衆的 修正主義의 대표적인 예는 Amsden(1989)으로서,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다룬 著書 *Asia's Next Giant*에서 “한국이야말로 일상적인 경제학 지혜의 범규(canon)를 어기고서 고속성장을 이룬 나라의 한 예이다”라고 하면서, 新古典派의 견해와는 달리, 한국은 價格歪曲의 最小化를 통해서가 아니라 政府의 意圖的인 價格歪曲을 통해 高速成長을 이루었고, 이는 後發走者가 先進國의 工業化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Countries with low productivity require low interest rates to stimulate investment, and high interest rates to induce people to save. They need undervalued exchange rates to boost exports, and overvalued exchange rates to minimize the cost of foreign debt repayment and of imports - not just imports of raw materials, which rich and poor countries alike require, but also of intermediates and capital goods, which poor countries alone are unable to produce. They must protect their new industries from foreign competition, but they require free trade to meet their import needs.” (p. 13)

이같은 논리는 經濟學的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低金利의 혜택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經濟內의 누군가가 그 代價를 치른다는 것인데 그 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Rodrik (1995a)이 지적한 바와 같이, 一般均衡 效果를 고려하면 輸入에 대한 關稅(혹은 非關稅의 關稅效果)는 輸出에 대한 稅金과 같다는 Lerner의 對稱定理과 자신의 產業保護 주장이 어떻게 調和될 수 있

는 것인지, 또 換率政策에 관하여는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원貨가 지속적으로 高評價되었고 平價切下는 尙상 이 高評價를 뒤늦게 修正하기 위한 것이었던 경험 등등에 관하여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開途國의 경험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不正 腐敗의 원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일본, 한국, 대만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에 대해, 강력한 政府가 受惠企業으로부터 輸出 實績, 成長에 대한 공헌을 反對給付로 받아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World Bank의 *The East Asian Miracle* 이라는 보고서는 新興工業國 成長에 관하여 貯蓄率 提高, 人的資本 擴充, 건전한 巨視經濟運營, 價格歪曲 回避 등 根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新古典 經濟學的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으며, 特定產業育成을 목적으로 하는 產業政策의 效果에 대해 일반적으로 否定的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만, 일본의 경우는 例外的으로 政府의 介入이 市場競爭의 結果를 改善하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의 정부가, 企業間 및 政府-民間 協調가 가져올 수 있는 肯定的 效果와 市場競爭(competition)을 結合시키는 일종의 競爭(contest)을 창출해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競爭의 특징은, 어느 企業이 정부로부터 金融上 혹은 外換使用上의 支援을 얻기 위해서는 實績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競爭의 예로 民官審議機構를 통한 民間部門 투자의 調整을 들고 있다. 이런 競爭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들에 有能하고 政治的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었던 官僚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6)</sup>

그러므로 World Bank의 입장은 Amsden流의 修正主義와 비교해볼 때, 一般論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대만, 일본은 例外였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成長經驗에서 資源配分에 대

6) World Bank(1993), p. 11.

한 政府의 介入이 市場競爭의 結果를 改善하였느냐는 점에 관해서는 일부 肯定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일부 肯定”이라고 한 것은, 金融抑壓(financial repression)下的 기업들에 대한 信用配分, 특히 1960년대 輸出企業에 대한 信用配分에 관하여는 분명히 성공적인 市場介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特定產業育成 政策에 관하여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경우에 市場順應的인 產業構造를 낳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다른 나라의 失敗와 비교해볼 때 成功이었다는 아리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特定產業育成 政策이란 1970년대의 重化學工業政策인데, 그 결과 市場順應的인 産業구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당시의 낮은 賃金과 勞動集約度에 근거하여 Heckscher-Ohlin 定理가 예견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勞動集約的인 産業의 比重이 높은 産業構造를 이루었다는 것이다.<sup>7)</sup> 분명히 큰 비용을 지불하며 실시하였던 重化學政策의 결과가 그 정책이 없더라도 이루어졌을 ‘市場順應的’인 産業構造를 달성한 것에 불과한데 이 정책을 成功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重化學工業政策에 관해 이처럼 首肯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동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던 한국에 관한 參考論文(background paper)인 Kim and Leipziger(1993)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듯싶다. 이 참고논문은 “[重化學工業政策이] 勞動集約的인 産業과 巨視經濟에 害를 끼치는 등 短期的인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래도, 重化學工業政策은 2次 石油波動의 영향이 극복된 뒤에는 그 目標를 대체로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重化學工業政策을 하나의 成功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sup>8)</sup>

7) 上揭書, Ch. 6, “Using Resources Efficiently.” 특히 pp. 312~315 참조.

8) Kim and Leipziger (1993), p. 25.

이 重化學工業政策은 물론 經濟·社會的 費用을 수반하는 것이었는데, World Bank는 그 가운데 政策金融 및 免稅 등을 통한 支援—일종의 政府支出—과 銀行 등 金融機關들이 지게 된 不實債權 등만을 費用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겠으나, 輕工業에 대한 차별대우로 輕工業部門이 받은 輸出과 成長의 沮害를 重化學工業政策의 費用으로 치지 않았다. 이러한 費用을 고려할 때 重化學工業政策이 달성한 成果가 그만큼 價値가 있었던 것인가 등등의 의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저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成功的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World Bank의 입장에 가깝든지 혹은 Amsden流에 가깝든지간에 修正主義가 단순히 하나의 주장에 그치지 않으려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新古典 經濟學은 市場失敗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對內的으로는 政府의 不干涉 아래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自由貿易下에 經濟活動이 市場原理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最善의 경제성과를 가져온다는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修正主義는, 이것이 틀렸고 政府介入을 통해 比較優位에 따른 資源配分보다 더 나은 資源配分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는 그 나름의 논리체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政府介入은 반드시 費用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政府가 無에서 有를 創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部門, 產業 혹은 個別 企業에게 金融, 稅制, 貿易政策上的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經濟內的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金融, 稅制, 貿易政策上的 不利益이 돌아가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政府가 介入한다는 것은 不利益을 받는 經濟主體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稅收로 支援하고자 하는 經濟主體들에게 補助金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 자체도 資源의 再配分이고 그로 인한 誘因體系의 변화도 資源의 再配分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러한 資源의 再配分은 첫째, 靜態的 比較優位가 높은 產業에서 낮은 產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둘째, 比較優位에 큰 차이가 없는 産業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 셋째, 比較優位가 낮은 産業에서 높은 産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의 경우, 즉 比較優位가 낮은 産業에서 높은 產業으로 資源의 再配分이 일어난다는 것은 一見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比較優位가 이미 높은 產業을 政府가 支援해줄 이유가 무엇이나라는 의문을 일으킨다. 만약 일반적으로 比較優位가 낮은 產業에서는 경제주체들의 퇴출이 늦고 比較優位가 높은 産業에서는 進入이 늦다면 이 정부개입은 바람직한 産業構造의 변화를 加速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前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比較優位가 낮은 產業에 종사하고 있지만 높은 效率성을 지닌 개별 企業이 比較優位가 높은 產業에 종사하고 있지만 效率성이 낮은 企業을 위해 稅金을 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可能性은 둘째의 경우에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진정코 무엇 때문에 정부개입이 바람직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여하튼, 修正主義의 입장이, 단순히 比較優位에 따른 産業構造의 變化를 促進하기 위해 政府介入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修正主義의 입장은 좀더 적극적으로, 靜態的 比較優位가 높은 産業으로부터 낮은 產業으로 資源을 再配分함으로써 後者の 比較優位를 높이고 생산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資源의 再配分은 靜態的인 뜻에서 資源을 非效率的으로 쓰는 것이므로 生産의 減少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政府介入이 이를 보상하고도 남는 生産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근자의 新貿易論과 內生的 成長論은 그 可能性을 제시한다.

이 새로이 등장한 理論들은 新古典 經濟學의 틀에 不完全 競爭이나 規模의 經濟를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知識과 人的資

本 등의 成長의 源泉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修正主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産業에 規模의 經濟가 있다면, 政府의 도움이 없이는 그 産業의 比較優位가 낮더라도, 政府補助 혹은 保護를 통해 생산규모를 증대시킬 때 比較優位가 높아지고 政府介入으로 일어나는 費用을 증가하고도 남는 生産增大를 이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혹은, 제3국 市場에서 다른 나라 企業과 함께 寡占的 지위를 가지고 있는 自國 企業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그 市場에서 정부 補助의 비용을 증가하는 큰 利潤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國際貿易의 결과 資源이 研究開發(R&D)이 활발한 부문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人的資本의 費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 國際貿易은 成長에 도움이 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成長을 阻害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貿易과 成長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理論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可能性은 아직 檢證되지 않은 可能性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9)</sup>

그런 가운데 Rodrik(1995b)은 한국과 대만의 成長經驗을 이 可能性을 實證하는 예로 들고 있다. 그의 論旨은, 한국과 대만의 高速 成長은 政府가 소위 調整失敗(coordination failure)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調整失敗란, 개별적으로는 收益率이 낮은 여러 投資들을 함께 이루어지도록 調整함으로써 모두 높은 收益率을 얻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投資調整이 市場의 自律에 맡겨졌을 때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그에 의하면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에

9) 産業 및 貿易政策에 관한 근자의 理論과 實證을 개관한 Rodrik(1995a)도, "However, the new literature is far from having yielded robust conclusions. ... [M]ore often than not it has led to a bewildering array of special cases and an embarrassingly rich set of possible outcomes from policy intervention. Consequently, it may be a mistake to think of it as having significantly enhanced the case for intervention."이라고 평하고 있다.

調整失敗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었는데 정부개입으로 타개하여 고속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 두 나라에서는 熟練勞動(人的資本)은 풍부하나 物的資本은 부족하였던 賦存與件과 製造業에 存在하는 規模의 經濟 때문에 潛在收益率은 높으나 調整失敗의 문제가 있었는데, 政府가 補助金 및 稅制上的 誘因 제공, 公共投資, 行政指導 등 市場介入을 통해 投資收益率을 높여줌으로써 調整失敗를 타개하였고 이것이 投資增大와 成長의 加速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成長이 輸出入 등의 對外去來에 의해 主導되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對外去來가 投資와 成長을 이끈 것이 아니라 政府의 支援으로 가능했던 投資增大가 資本財輸入에 대한 需要를 높이고 이에 副應하여 輸出(供給)이 增大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4. 한국의 成長經驗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論理的인 可能性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事實이었다 하기 어렵다. <표 1>에서 보듯이, 商品輸出의 增大가 輸入이나 投資의 增大에 先行하였기 때문이다.

國民計定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經常基準 절대액으로 보든지 혹은 國民總生産에서의 비중으로 보든지 投資가 急增하기 시작한 해는 빨라야 1965년 그렇지 않으면 1966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비해 輸出이 급증하기 시작한 해는 1963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해 수출총액이 經常달러 기준으로 60% 가까이 急增하였을 뿐 아니라 그 急增이 ‘원료별 제품(SITC 6)’과 ‘잡제품(SITC 8)’의 急增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두 商品群은 가발, 합판, 의류, 섬유제품, 여행용구, 신발 등등 당시 우리 輸出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勞動集約的 商品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



〈표 1〉 固定資本 形成, 輸出, 輸入

|      | 總固定資本形成<br>(경상 10억원) | 輸 出<br>(경상 100만달러) |            |            | 輸 入<br>(경상 100만달러) |                |
|------|----------------------|--------------------|------------|------------|--------------------|----------------|
|      |                      | 총액                 | 원료별<br>제품  | 잡제품        | 총액                 | 기계류및<br>운반용 기기 |
| 1960 | 26.54 (10.8)         | 33                 | 4 (12.1)   | 0.1 (0.3)  | 344                | 40 (11.6)      |
| 1961 | 34.29 (11.6)         | 41                 | 4 (9.8)    | 1 (2.4)    | 316                | 42 (13.3)      |
| 1962 | 48.62 (13.9)         | 55                 | 6 (6.9)    | 2 (3.6)    | 422                | 70 (16.6)      |
| 1963 | 68.04 (13.9)         | 87                 | 28 (32.2)  | 6 (6.9)    | 560                | 116 (20.7)     |
| 1964 | 81.44 (11.6)         | 119                | 42 (35.3)  | 13 (10.9)  | 404                | 70 (17.3)      |
| 1965 | 119.17 (14.8)        | 175                | 66 (37.7)  | 34 (19.4)  | 463                | 73 (15.8)      |
| 1966 | 208.69 (20.2)        | 250                | 84 (33.6)  | 59 (23.6)  | 716                | 172 (24.0)     |
| 1967 | 272.96 (21.5)        | 320                | 101 (31.6) | 97 (30.3)  | 996                | 310 (31.1)     |
| 1968 | 411.66 (25.8)        | 455                | 144 (31.6) | 167 (36.7) | 1,463              | 533 (36.4)     |
| 1969 | 522.94 (26.6)        | 623                | 174 (27.9) | 242 (38.8) | 1,824              | 593 (32.5)     |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국민총생산, 총수출 혹은 총수입 중의 비중. 단위는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0.

문이다. 이러한 상품군의 輸出增加가 修正主義의 견해와 같이 政府의 資源配分介入 없이는 不可能했던 것이라 믿기 어렵다. 勞動만이 풍부한 資源이었던 당시의 賦存與件에 비추어볼 때 노동집약적 재화가 수출증대를 주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輸入쪽에서, 投資增大는 ‘기계류 및 운반용기기(SITC 7)’의 輸入增大를 유발하는데, 이 점은 현재도 그렇고 重工業이 보잘것없던 당시에는 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이 商品群의 輸入이 急増하기 시작한 해는 1966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投資急増이 시작한 것과 같은 연도이다. 따라서 우리의 成長經驗에서 輸出增加가 投資 및 輸入增加의 原因이지, 修正主義가 주장하듯이 그 반대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修正主義는 왜 이같이 다분히 무리한 理論을 展開하는가? 그것은 修正主義가, 東아시아 ‘奇蹟’의 이유가 이 나라들 안에

있다는 前提에서 出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서는 東아시아 경제 및 사회의 共通된 특징에서 奇蹟의 이유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西歐의 경험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政府介入이 東아시아의 共通된 특징이므로, 이것이 高速成長의 원인이었다고 그저 主張하거나(Amsden流), 일반적으로는 原因이 될 수 없으나 東아시아의 경우는 例外的으로 原因이었다고 하거나(World Bank流), 혹은 이를 新貿易論 및 內生的 成長論의 틀 아래 事後的으로 理論化하려고 試圖하였다는(Rodrik流) 인상이 짙다.

이 修正主義가 輸出과 投資 사이의 因果關係에 관해 주장하는 바가 우리 경제의 成長經驗과 다르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들은 한국의 開發戰略 혹은 經濟政策이 약 10년을 週기로 바뀌었다는 점을 等閑視하고 있다. 市場의 資源配分에 대한 政府介入이 매우 심한 편이었고 民間部門에 대한 政府의 영향력이 至大하였다는 것은 建國 이후 지금까지 一貫된 일이나, 이 政策들의 經濟學的 의미는 크게 다르다. 6·25戰爭 이후 1950년대에는 輸入代替 工業化를, 1960년대에는 輸出促進을, 1970년대의 重化學工業政策은 特定產業育成을 추구하였고, 1980년대에는 巨視的 安定과 市場機能의 活性化에 역점을 두었고, 1990년대의 文民政府는 市場經濟의 제도적 기반의 定立을 위해 각 部門의 制度改革과 規制緩和를 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960년대에는 輸出急增과 高速成長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1970년대에는 자원배분에 대한 政府介入이 가장 심하였기 때문에, 이 두 10년간 政策의 經濟的 效果가 무엇인지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관심의 초점은, 市場의 資源配分을 바꾸어 놓은 政府介入이 修正主義가 주장하듯이 成長을 加速하였는지 與否에 있는 것이다.

1960년대 輸出促進政策의 효과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그 政策이 1950년대의 여러 輸入抑制 措置를 그대로 둔 채 취해졌다는 사실이다. 國內産業 保護를 위한 關稅 혹은 非關稅 무역장벽은 產出物의 國內販賣를 有利하게 만듦으로서 輸出을 상대적으로 不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sup>10)</sup> Lerner의 對稱定理가 말해주듯이, 財貨가 두개 있는 國際貿易 模型에서는 輸出에 대해 稅金을 賦課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반면에 輸出促進政策 아래 취해진 여러 가지 誘因은 물론 輸出에 補助金을 주는 효과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당시 政府정책에 관하여 논의할 때에는 貿易障壁의 효과와 輸出誘因의 효과를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에 있어 이 두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 한 Westphal and Kim(1982)에 의하면 이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輸出業者들은 誘因體系가 中立的인 自由貿易과 같은 輿件 아래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sup>11)</sup> 당시의 貿易障壁은 거의 완벽한 것이었고,<sup>12)</sup> 輸出促進政策은 상상할 수 있는 誘因을 거의 모두 동원하였었던 것임을 상기할 때 Westphal과 Kim의 推定이 實際效果에 매우 근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1960년대의 輸出增大가 政府의 市場介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때의 政府介入은 한 손으로는 輸出 앞에 장애물을 장치하고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除去하

10) 貿易障壁을 통한 國內産業의 保護가 輸出活動을 沮害하는 效果의 이론적 논의와 實證分析에 관하여는 俞正鎬 外(1993) 참조.

11) "To offset the consequent bias [of protectionist policy] against exports, the government provided several explicit export subsidies, including concessions on direct taxes, credit subsidies, and generous wastage allowances on imported inputs. As a result, the average effective subsidy rates on domestic sales and exports were almost equal in 1968... The government has provided, on the average, almost equal incentives to production for domestic sale and for export." p. 270, Westphal and Kim(1982).

12) 金光錫과 웨스트팔(1976) 참조.

였던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輸出增大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한다.)

이에 비해 1970년대의 重化學工業政策은 特定産業의 育成을 위해 政府가 市場을 제쳐놓고 직접 資源을 配分한 것인데, 政府介入이 修正主義의 주장과 같이 成長과 工業化를 加速할 수 있다면, 이 政策이 그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例이다. 그러나 이 政策은 당시 우리 輸出의 大宗을 이루고 있던 勞動集約的 商品을 생산하는 輕工業을 稅制와 投資配分에서 차별대우하였고, 重化學 製品 輸入에 대한 貿易障壁을 강화함으로써 輕工業의 輸出을 상대적으로 不利하게 만든 효과를 내었다. 그 결과 1970년대말, 한편으로는 重化學部門에서 過剩投資로 인한 稼動率 하락이 심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OECD 輸入에서 차지하는 우리 輕工業 輸出의 市場占有率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總輸出의 占有率 역시 하락하였다. 이것이 1970년대말 우리 輸出이 實質基準으로 成長率이 급격히 둔화하다가 1979년에는 절대적으로 減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는 당시 成長率 鈍化와 1980년 負(-)의 成長의 背景을 이루고 있다.<sup>13)</sup>

이와 같은 우리 經濟의 成長經驗에서 修正主義 見解를 지지하는 證據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政府介入이 항상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약 10년을 주기로 政府介入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政府介入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위에서와 같이 그 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政府介入이 高速成長의 원인이었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13) 重化學部門의 過剩投資와 稼動率 하락에 관하여는 1979년 4월 經濟企劃院이 발표한 「綜合安定化 施策」(『開發年代의 經濟政策: 經濟企劃院 20年史』, p. 323) 참조. 美國 輸入 중 한국 수출의 市場占有率에 대한 重化學工業政策의 影響에 관하여는 兪正鎬(1991) 참조.

### Ⅲ. 東아시아 NICs 成長의 作動原理와 特徵

東아시아 ‘奇蹟’을 설명함에 있어 修正主義 見解는 그 高速成長의 理由를 東아시아 國家들의 政策에서 찾으려 하고 있고, 世界市場 與件 특히 西方 先進國이 工業化 過程을 거치던 시기에 비해 수 백배 커진 世界市場 規模가 東아시아의 工業化 속도를 加速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무관심하다. 이 점에 있어서 新古典 經濟學도 크게 다르지 않다. 對外指向 戰略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으나 世界市場 規模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

#### 1. 交易의 影響에 관한 표준 國際貿易論의 설명

交易의 影響에 관하여 國際貿易論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요점은, 한 經濟가 開放하게 되면 生産이 生産可能曲線上的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移動하고 그 결과 福祉가 增大한다는 것이다. 이 福祉增大는, 각 財貨마다 國內 消費量과 產出量이 一致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産業間 資源 再配分の 결과이다. 開放前에 國內市場 價格이 世界市場에 비해 相對的으로 싼 상품도 있고 비싼 상품도 있게 마련인데(그렇지 않으면 交易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開放後 國內 資源이 比較優位가 낮은 後者로부터 比較優位가 높은 前者의 生産으로 再配分됨으로써 주어진 賦存資源으로부터 더 많은 產出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福祉가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貿易論의 說明은 보통 小規模開放經濟를 假定하는데,

이 假定은 世界市場이 無限大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어느 財貨의 輸出을 아무리 늘려도 그 財貨의 世界市場 價格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開放後의 資源 再配分은 주어진 世界市場 價格 아래 財貨間 限界轉換率(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 변함으로써 균형점을 찾는다. 限界轉換率은 어느 財貨 X의 生産을 한 단위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財貨 Y의 量인데, 生産可能曲線이 原點에 대해 오목하다는 假定 아래, X의 生産을 늘려감에 따라 그 限界轉換率은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率이 世界市場의 相對價格과 같아질 때 國內資源의 最適配分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再配分할 誘因이 없어지게 된다.<sup>14)</sup>

開放의 영향에 관한 國際貿易論의 이같은 설명은, 한 經濟가 開放을 통해 工業化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서는 未洽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첫째, 그 理論이 기초하고 있는 小規模開放經濟의 假定이다. 이 假定은 理論 전개를 단순화하는 역할을 한다. 世界市場의 相對價格 체계가 變化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開放後 資源 再配分이 어떻게 限界轉換率을 변화시켜서 주어진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같아지게 만드느냐만을 걱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世界市場의 規模는 물론 無限大가 아니다. 둘째, 이러한 國際貿易論의 설명은 賦存資源이 不變이라는 假定에서 출발하여 주어진 資源의 再配分으로 끝나고 있으나, 工業化란 資源의 再分配뿐 아니라 資本을 비롯한 여러 가지 資源의 蓄積이 그 본질인 과정인 것이다. 셋째, 國際貿易論이 보통 假定하듯 모든 生産要素가 完全雇傭상태에 있는 經濟가 개방하는 경우와 失業 및 僞裝失業이 만연한 經濟가 개방하는 경우에 開放의 효과가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4) 生産可能曲線이 '直線'이거나 原點에 대해 볼록할 경우 그 經濟는 어느 한 財貨의 生産에 特化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가능성을 표준 國際貿易論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章에서는 典型的인 開途國이 世界市場과의 交易을 시작할 때 받는 影響이 世界市場의 規模에 따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 2. 交易의 影響: 無限勞動供給 經濟의 경우

Adam Smith는 일찍이 分業이 市場의 크기(extent)에 의해 制約된다고 관찰하였다. 分業은, 경제주체들이 自家 消費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물건을 생산해서 그 초과분을 자기가 원하는 다른 물건과 바꿀 가능성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초과분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즉 얼마나 特化할 것인가는 市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國際分業을 통한 特化의 정도 역시 世界市場의 크기에 의해 影響받는다.<sup>15)</sup> 이는 물론 世界市場 規模가 國際分業을 制約한다는 견해이다. 달리 표현하면, 世界市場 規模의 增加는 그 制約性을 점점 弱화시켜서 國際分業을 통한 特化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점은 工業化 速度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工業化에 관한 논의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國際分業에 참가하는 經濟의 對內與件이다. 東아시아 經濟들의 高速成長에 관하여 조사하려면 그들이 工業化 당시에 가지고 있던 對內與件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天然資源과 人的 및 物的 資本이 풍족하지 못하고 科學·技術이 뒤떨어져 있었던 반면 勞動人力은 풍부하였던 이 經濟들의 資源賦存 與件을 가장 잘 捕捉하는 개념은 소위 ‘無限 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다. Arthur Lewis는, 近代化 이전 開途國에 限界勞動生産性이 零이지만 零보다 큰 最低生

15)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ed. by E. Cannan, New York: Modern Library, 1937, p. 17.

計賃金(subsistence wage)을 받는 勞働人力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剩餘人力이라 부르면, 剩餘人力은 農業部門, 雜役(casuals), 小商人(petty traders), 家事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部門들의 產出을 減少시키지 않고 資本家(capitalist) 部門은 그 剩餘人力을 最低生計賃金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관찰한다.<sup>16)</sup>

이 節에서는 이러한 經濟的 特性을 가진 나라가 國際分業에 참가할 때 그 나라의 工業化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한 經濟의 比較優位 構造에 관해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財貨가  $n$ 개 있고 어느 나라 A가 바깥세계 B와 交易을 시작하기 前의 財貨  $i$ 의 生産費를 각각  $P_i^A$ ,  $P_i^B$ 라 하면, 이 生産費 비율의 크기에 따라 財貨들을 다음과 같이 번호 매길 수 있을 것이다.

$$\frac{P_1^A}{P_1^B} < \frac{P_2^A}{P_2^B} < \dots < \frac{P_n^A}{P_n^B} \quad (1)$$

이때 A국의 比較優位는 財貨 1에서 가장 높고, 財貨 2에서 그 다음으로 높고, ... 하다가 財貨  $n$ 에서 가장 낮다. A가 世界市場과 交易을 트면 財貨를 1, 2, 3, ... 의 順序로 輸出할 것이다.<sup>17)</sup>

開放이란 內國人들에게 世界市場價格으로 去來하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는 比較優位가 높은 財貨를 輸出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潤을 급격히 높여준다. 式 (1)에서 一般性を 손상함이 없이, 각 財貨의 바깥세계 價格이 1이 되도록 財貨들의 물리적 단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式 (1)에서 각 財貨의 A 對 B 生産費 比率은 한 單位의 購買力(外貨)을 얻는 데 소요되는 A國의 資源費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比率들 사이의 不等關係는 比較優位가 높은 財貨

16) Lewis(1954).

17) 이 점에 관하여는 Yoo(197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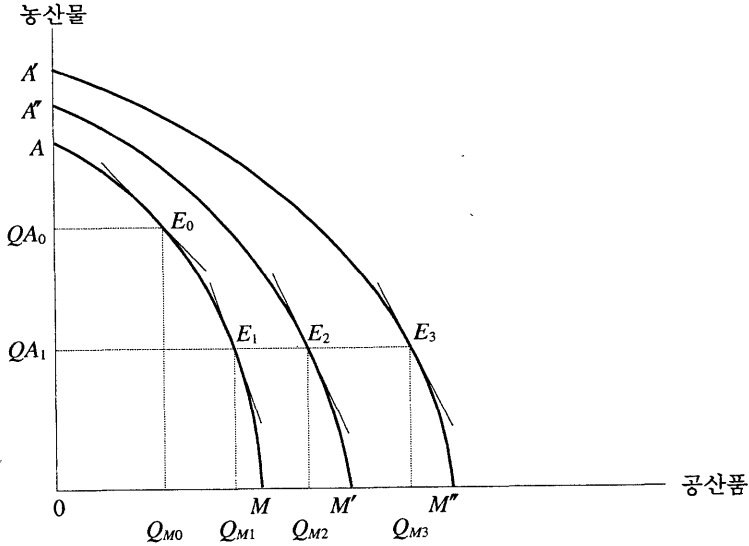
일수록 그 資源費用이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A가 開放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주체들은 比較優位 1位 財貨를 輸出하려고 生産을 증대하기를 원할 것이다. 표준 模型에서 開放後에 주어진 賦存資源의 再配分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資源 再配分은 無限勞動供給의 經濟에서도 일어난다. 無限勞動供給 經濟에서 표준 模型과 다른 점은 開放後의 變化가 既存의 賦存資源 再配分으로 그치지 않고 勞動集約的 産業에 대한 새로운 投資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短期에서 賦存資源의 最適 配分이 이루어지더라도, 長期에서는 無限勞動供給이 지속되는 한 勞動集約도가 높은 産業일수록 比較優位가 높다는 關係가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投資에 대한 誘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但書는 世界市場에서 勞動集約的 財貨의 價格이 하락하지 않는 동안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界市場 規模가 無限大인 극단의 경우, 無限勞動供給의 經濟는 가장 勞動集約的 工產品 하나의 生産을 증대함으로써 農業部門의 人力을 製造業部門으로 흡수하고 總產出 중 그 部門의 比重을 높여 소위 ‘工業化’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같은 無限勞動供給 經濟에 대한 開放의 效果에 관하여 표준 模型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논의에 [그림 2]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그림 자체를 설명하면, 그림에는  $AM$ ,  $A'M'$ ,  $A''M''$  등 세개의 生産可能曲線이 있는데 각각은 두 가지 財貨의 生産 可能한 組合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財貨는 이 글의 주제에 맞추어 農產物과 工產品이다. 工業化란 製造業部門과 農業部門의 상대적 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開放前의 生産可能曲線은  $AM$ 인데 開放前의 生産點은  $E_0$ 이고,  $E_1$ 에서 世界市場 相對價格을 나타내는 線이

[그림 2] 無限勞動供給下的 生産增大



AM과 접한다. 이는 工產品의 比較優位가 農産物에 비해 높다는 事實 假定인데, 경작지가 부족하고 勞動이 豊富한 나라는 農業部門보다 勞動集約度가 높은 製造業部門에서 比較優位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sup>18)</sup> 生産可能曲線은 표준 國際貿易論의 模型에서와 같이 原點에 대해 오목한 모양이다.

[그림 2]에서 새로운 投資가 이루어지기 전 開放의 短期效果는 生産點이  $E_0$ 에서  $E_1$ 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農産物의 生産은  $Q_{A0}$ 에서  $Q_{A1}$ 으로 감소하고 工產品의 生産은  $Q_{M0}$ 에서  $Q_{M1}$ 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生産의 減少와 增加가 얼마나 클 것인가는 經驗적인 질문이다. 工業化 이전의 한국경제에서와 같이, 農業과 製造業部門 모두 勞動 이외에는 資源의 不足이 심하고 이것이 製造業部門의 雇傭增加를 가로막는 중요한 要

18) 工業化 以前의 經濟에 勞動集約度가 낮고 資本 및 기타 資源의 集約度가 높은 製造業 産業들은 아직 存在하지 않을 것이므로 資源配分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인 경우, 開放後 再分配될 資源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그 再配分으로 인한 農産物의 生産減少도 工産品의 生産增加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生産點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 글의 주제에 비추어 주된 관심은 그에 따른 生産費 및 生産要素들의 要素費用(factor price)의 變化에 있다. 먼저 표준 國際貿易論의 模型에서 일어나는 變化를 살펴보고 無限勞動供給 경제에서 일어나는 變化는 어떻게 다른가 논의한다. 生産點 移動의 이유는 開放 당시 A國의 財貨間 限界轉換率에 주어진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림 2]의  $E_0$ 에서 工産品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農産物의 量이 農産物로 표시한 工産品의 世界市場 相對價格보다 작기 때문이다. 生産可能曲線이 原點에 대해 오목하므로, 開放後 A가 工産品의 生産을 증대함에 따라 農産物로 표시한 公産品의 限界轉換率은 더 커질 것인데, A는 이 率에 주어진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같아질 때까지 公産品의 生産을 증대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표준 模型에서는 生産要素들의 要素費用이 國內과 바깥世界 사이에 일치하게 된다.<sup>19)</sup> 이 要素費用의 均等化는, 生産要素에 資本과 勞動 두 가지가 있고 勞動이 淸요한 生産要素인 경우, 賃金이 상승하고 地代(rent)가 하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開放後 比較優位가 높은 勞動集約的 財貨의 生産이 늘고 比較優位가 낮은 資本集約的 財貨의 生産이 減少함에 따라 勞動에 대한 需要는 늘고 資本에 대한 需要는 줄기 때문이다. 이같은 要素費用의 變化는 財貨間 國內 生産費比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두 交易相對國 사이에 生産技術에 차이가 없다는 假定 아래에서는, 兩者가 일치할 때 要素費用의 均等化는 完結된다. 그 결과 표준 模型에서는 새로운 生産點  $E_1$ 에서 다음

19) Samuelson(1949, 1948) 참조.

의 관계가 성립한다.

$$\text{財貨間 生産費 比率} = \text{財貨間 限界轉換率} = \frac{\text{世界市場}}{\text{相對價格}} \quad (2)$$

$$\text{國內 要素費用 比率} = \text{바깥세계 要素費用 比率} \quad (3)$$

[그림 2]에서 (3)의 比率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財貨間 (2)의 比率 혹은 相對價格은  $E_1$ 을 통과하는 接線의 기울기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無限勞動供給 經濟에서는  $E_1$ 에서 이러한 調整이 完結되지 못하고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text{財貨間 生産費 比率} \neq \text{財貨間 限界轉換率} = \frac{\text{世界市場}}{\text{相對價格}} \quad (2)'$$

$$\text{國內 要素費用 比率} \neq \text{바깥세계 要素費用 比率} \quad (3)'$$

즉 財貨間 限界轉換率は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하겠으나 財貨間 生産費 比率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고 要素費用 均等化는 完結되지 못한 채 그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生産點  $E_1$ 은 財貨間 限界轉換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같아지는 점이므로, 式 (2)'의 等式部分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3)'의 不等關係는 要素費用 比率의 均等化가 完結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無限勞動供給 經濟가 開放한 후 勞動集約的 財貨에 대한 需要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勞動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더라도 雇傭은 늘겠지만 賃金은 最低生計賃金에서 不變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經濟의 實質賃金이 바깥세계와 같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要素費用 比率의 均等化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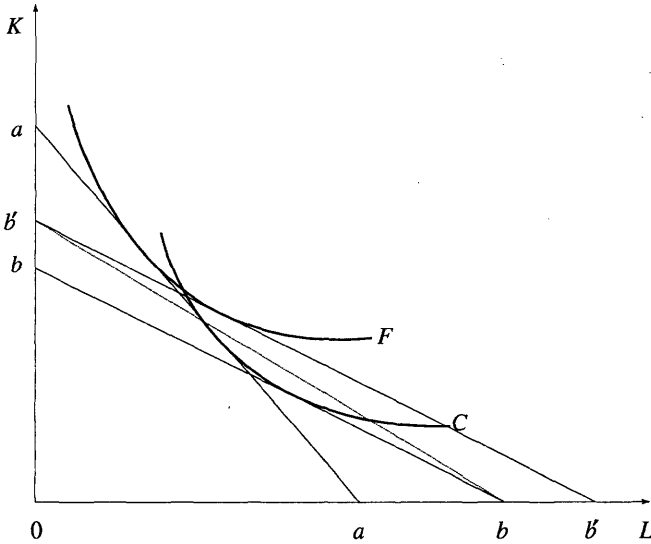
이 經濟에서도 資本 및 기타 生産要素에 대한 需要 減少는 그 要素費用의 下落을 가져올 것이므로, 賃金이 어느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도 賃金 對 地代 比率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써 要素費用 比率이 바깥세계와 같아진다는 것은 賃金이 最低生計 賃金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현실적인 可能性이 아니다. 最低生計 賃金이 바깥세계의 賃金에 비해 낮은 정도보다 國內 地代가 바깥세계의 地代에 비해 낮은 정도가 더 커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最低 生計 賃金이 바깥세계 賃金の 1/10이라면 그 나라의 地代는 바깥세계 地代の 1/10보다 더 낮아야 賃金 對 地代 比率이 바깥세계와 같아질 수 있다. 그러나 資本이 貧困한 나라가 開放한다고 해서 그 地代가 資本이 풍요한 나라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無限勞動供給 經濟의 경우에는 開放後 要素費用 比率의 均等化가 完結될 수 없다.

셋째, (2)에서 財貨間 生産費 比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같아지지 않는 것은 要素費用의 均等化가 完結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 模型에서는 開放後 要素費用의 均等化 과정에 賃金 對 地代 比率이 上昇하고, 이 比率 變化가 財貨間 生産費 比率을 변화시키되 勞動集約的 財貨일수록 生産費를 相對的으로 더 높임으로써  $E_1$ 에서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시킨다. 그런데 無限勞動供給에서는 開放後 地代는 하락할 수 있으나 賃金上昇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勞動集約的 財貨의 生産費가 표준 模型에서와 같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財貨間 生産費 比率의 世界市場 相對價格에의 近接이 中途에서 中止하는 것이다.

[그림 3]은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資本( $K$ )과 勞動( $L$ ) 두 平面 위에 두 等量曲線(isoquant)  $F$ 와  $C$ , 그리고 이에 접하는 세개의 等費用線(iso-cost)  $aa$ ,  $bb$ ,  $b'b'$ 이 그려져 있다.  $bb$ 와  $b'b'$ 는 平行이고 같은 賃金 對 地代의 比率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aa$ 가 반영하는 賃金 對 地代 比率보다 낮다.  $aa$ 는 두 等量曲線에 모두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財貨  $F$ 와  $C$ 의 生産費가 같도록 물리적 단위가 정해져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等量曲線  $F$ 에 접하는

[그림 3] 要素費用과 生産費 比率



$b'b'$ 가  $C$ 에 접하는  $bb$ 에 비해 原點에서 더 멀리 위치해 있다는 것은, 賃金 對 地代의 比率이 바깥세계에 비해 낮을수록 勞動集約的 財貨  $C$ 의 生産費가  $F$ 보다 더 낮다, 즉 比較優位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等費用線  $aa$ 가 바깥세계의 要素費用을 반영하고  $bb$  및  $b'b'$ 가 開放하려는 開途國의 것을 반영한다면, 표준 模型에서는 限界轉換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하는 과정에서 要素費用 均等化가 일어나  $bb$  및  $b'b'$ 가  $aa$ 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게 되면  $F$ 와  $C$ 의 生産費도 같아지게 되나, 要素費用 比率의 均等化가 完結되지 않아서 새로운 比率이, 가령 점선으로 표시된  $bb'$ 의 기울기 정도로 상승하는데 그쳤다면 이 要素費用 比率 아래에서도  $F$ 의 生産費가  $C$ 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要素費用 比率이  $aa$ 의 기울기와 같아질 때까지  $F$ 의 生産費는  $C$ 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財貨가多數 있는 경우에는 式 (1)의 不等關係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無限勞動供給 經濟의 경우  $E_1$ 에서 財貨間 生産費 比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하지 않는데, 이 點에서 限界轉換率은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하므로 (2)의 不等關係가 성립한다. 즉 無限勞動供給 經濟에서는 財貨間 限界轉換率과 生産費 比率 사이에 乖離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限界轉換率이 生産費와 괴리된다면 限界轉換率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無限勞動供給 經濟에서는 限界轉換率이 勞動과는 상관없이 勞動以外 生産要素의 投入量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農業部門 및 製造業部門의 產出量이 勞動以外 生産要素의 投入量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農業部門에서는 勞動 限界生産性이 零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하다. 製造業部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部門이 당면하는 賃금이 最低生計賃금에 固定되어 있고 勞動供給이 그 賃금에서 '無限'하므로 勞動以外 生産要素의 投入量만 결정되면, 그 投入量을 반영하는 勞動의 限界生産性이 最低生計賃금과 일치하는 점에서 勞動 雇傭量은 결정된다.<sup>20)</sup> 따라서 勞動以外 生産要素의 投入量이 결정되면 주어진 財貨의 產出量은 결정된다. 이런 뜻에서 두 財貨間 限界轉換率의 결정에 勞動이 하나의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sup>21)</sup>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일어날 수 있다. 生産點  $E_1$ 에서 성립하는 式 (1)의 不等關係는 比較優位(1位) 財貨의 生産을 늘리고 比較劣位(1位) 財貨의 生産을 줄이려는 誘因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

20) 이 점이 완전고용을 假定하는 표준 國際貿易論 模型과 다른 점인데, 표준 模型에서는 賃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勞動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해 內生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勞動 雇傭量은 勞動以外 生産要素의 投入量뿐 아니라 賃금을 결정하는 要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21) 資本과 勞動 두 가지 生産要素만 존재한다는 假定 아래에서 勞動의 投入量이 限界代替率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生産可能曲線은 그러한 區間에서 直線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3, 제4의 生産要素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표준 模型에서와 같이 原點에 대해 오목한 모양의 生産可能曲線을 유지한다.

미하는데, 왜 [그림 2]에서 農産物과 工産品은  $E_1$ 의 生産量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는가? 그 답은 물론 그 점에서 限界轉換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과 일치한다는 데 있다. 가령,  $E_1$ 에서 工産品の 生産을 한 단위 늘린다면, 그로 인한 農産物 減産量의 價値가 世界市場 相對價格에 비추어볼 때 工産品 價値보다 더 크게 된다. 이 限界轉換率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勞動以外 生産要素에 의해 결정되는데, 短期에 있어서는 그 賦存量이 주어져 있고,  $E_1$ 은 주어진 賦存 生産要素들의 最適配分이 달성된 生産點인 것이다. 그러므로 短期에 있어 資源 再配分の 誘因은 없는 한편 式 (1)의 不等關係는 賦存資源을 증가시킬 새로운 投資에 대한 誘因으로 작용한다.

工業化의 관점에서 관심 있는 일은, 開放後 短期에서 일어나는 주어진 賦存資源의 再配分보다는 資本을 비롯한 여러 資源의 蓄積과 그 결과에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開放後 도달하는 새로운 生産點  $E_1$ 에서는  $E_0$ 에 비해 勞動集約的 財貨일수록 生産費가 더 높아져서 財貨間 生産費 比率이 世界市場 相對價格에 더 근접하게 되지만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式 (1)의 不等關係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國內에서 生産하고 輸出함으로써 世界市場에서 한 單位의 구매력을 얻는 데 가장 資源費用이 낮은 것은 勞動集約도가 가장 높은 財貨라는 점에서 式 (1)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無限勞動供給 아래 賃金이 最低生計賃金에 固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無限勞動供給이 지속되는 한 가장 勞動集約도가 높은 財貨의 生産과 輸出을 증대하기 위한 投資를 지속할 誘因이 존재한다.

새로운 投資가 이루어짐에 따라 生産點이  $E_2$ 로,  $E_2$ 에서  $E_3$ 로 옮겨갈 것이다. 이 生産點의 移動은, 製造業部門의 고용비중이 農業部門보다 커지고 製造業部門의 生産이 農業部門에 비해 증가하는 것, 즉 工業化의 진전을 의미한다. 새로운 投資에 대한 誘因은 式



(1)의 不等關係가 지속되는 한 존재할 것이고, 그 不等關係는 無限 勞動供給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無限 勞動供給은 가장 資源費用이 작은 比較優位 1位 產業의 生産增大를 통해 工業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수월한 工業化를 가능하게 한다. 또 [그림 2]에서 生産點의  $E_1$ 에서  $E_2$ 로,  $E_3$ 으로의 이동이 나타나듯이, 農產物 生産의 減少 없이 工產品 生産 증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에서 수월한 工業化를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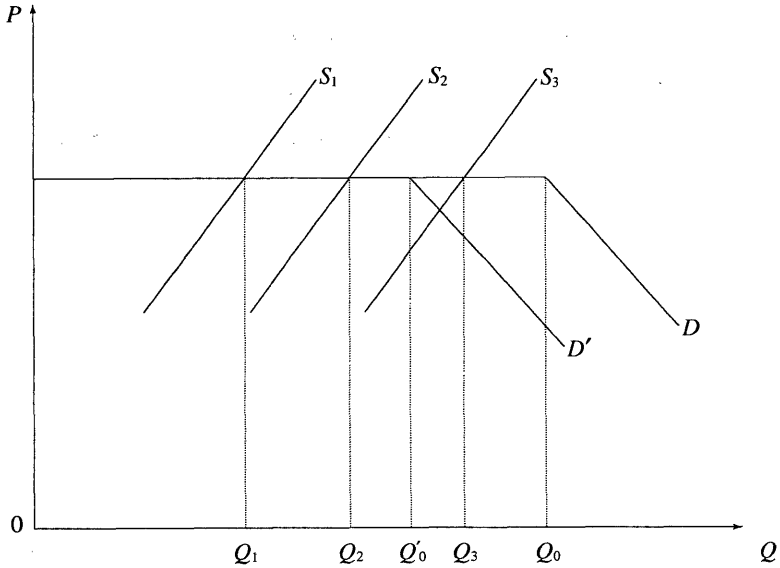
### 3. 世界市場 크기와 交易의 영향

여지껏 小規模開放經濟의 假定을 유지하였다. 즉 世界市場이 無限大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특정 財貨의 수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世界市場에서 그 財貨의 價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假定하였다. 이節에서는 그 假定을 버리고 世界市場의 크기가 無限 勞動供給 經濟의 工業化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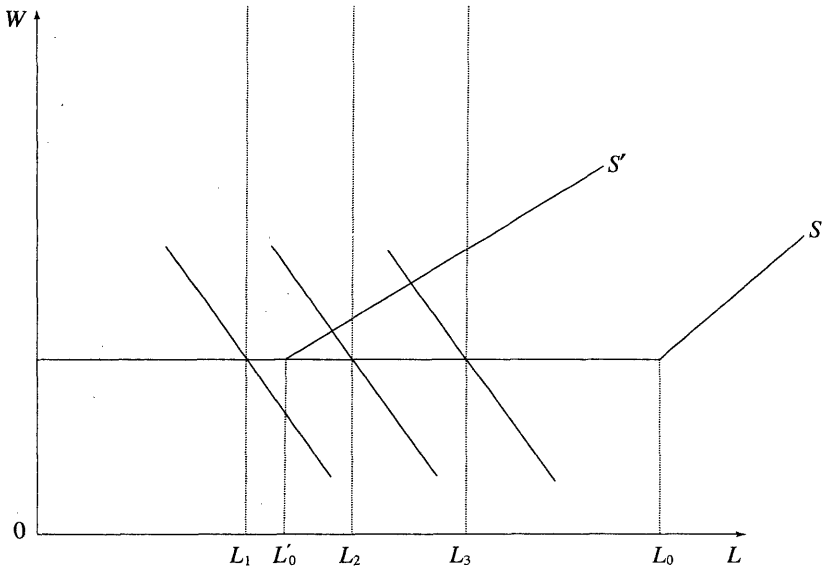
[그림 4]는 世界市場 및 國內 剩餘人力의 크기가 輸出과 雇傭에 미치는 影響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그림의 첫째 조각은 開放하는 開途國의 財貨  $i$ 의 輸出과 그에 대한 世界市場의 需要를 보여주고, 둘째 조각은 그 開途國 製造業部門의 勞動에 대한 需要와 供給을 보여준다. 財貨  $i$ 에 대한 需要曲線은 일정량  $Q_0$ 까지는 價格  $P_0$ 에서 수평축과 平行이다가 그후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小規模開放經濟의 가정 아래에서는 이 需要曲線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開途國이 어느 정도까지는 주어진 世界市場 價格으로 輸出을 늘릴 수 있으나 중국에는 그 財貨의 輸出價格이 하락하게 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즉 小規模開放經濟의 假定이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조각에서는 開途國의 勞動市場에서 供給曲線이 일정량  $L_0$ 가

[그림 4] 輸出과 雇傭에 대한 世界市場 및 剩餘人力 크기의 영향



첫째 조각 : 財貨  $i$ 의 輸出 및 世界市場의 需要



둘째 조각 : 國內製造業部門의 勞動에 대한 需要 및 供給

지는 수평축과 평행이다가 그후 上昇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製造業部門에 勞動力이  $L_0$ 까지는 일정한 賃金으로 공급될 수 있으나 需要가 계속 증가할 경우 中國에는 賃金이 上昇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역시 無限勞動供給의 假定이 무한히 妥當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開途國은 交易을 틔으로써 世界市場의 比較優位 1位 財貨에 대한 需要가 價格  $P_0$ 서 ‘無限大’라고 알고 輸出을 시도할 것이다. 둘째 조각에 이 經濟가 가지고 있는 초기 資本스톡을 반영하는 勞動力에 대한 수요가  $D_1$ 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때 雇傭은  $L_1$ 만큼 이고, 첫째 조각에 이에 대응하는 財貨  $i$ 의 輸出供給曲線은  $S_1$ 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수출량은  $Q_1$ 이다. 投資가 이루어져 資本스톡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D_2, D_3$ 로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출공급은  $S_2, S_3$ 로 증가하며 수출량은  $Q_2, Q_3$ 로 증가할 것이다.

世界市場과 開途國內 剩餘人力의 상대적 크기가 開途國 工業化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世界市場이 剩餘人力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小規模開放經濟의 假定이 타당한 경우이다. 즉 開放하는 開途國이 그 剩餘人力을 比較優位 1位 財貨의 生産에 모두 투입하여도 世界市場에서 그 財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그림 3]의 둘째 조각에서 勞動供給曲線을  $S$ 가 아니라  $S'$ 로 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比較優位 1位 財貨의 生産에 투입될 人力에 대한 需要가  $D_1, D_2, D_3$ 로 증가하면 그에 따라 이 開途國의 輸出이  $Q_1, Q_2, Q_3$ 로 증가할 터인데, 수출량이  $Q_0$ 를 초과하기 전에 국내에서 勞動供給曲線  $S'$ 가 上向하기 시작한다. 이 경우에는 比較優位 1位の 生産과 輸出만으로 剩餘人力을 모두 消盡하는 정도의 工業化를 이룰 수 있다. 2節

에서의 논의와 연결시키자면, 이제부터 勞動에 대한 需要增加는 賃金を 상승하게 함으로써 중국에는 國內과 바깥世界 사이에 生産要素間 要素費用의 比率이 같아지고, 財貨間 生産費 比率과 世界市場 相對價格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世界市場이 剩餘人力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이다. 한 나라의 剩餘人力을 比較優位 1位 財貨의 生産에 다 消盡하기 전에 그 輸出價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이다. [그림 4]로 설명하면, 그 輸出財貨에 대한 世界市場의 需要가  $D$ 가 아니라  $D'$ 로 표시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로, 剩餘人力에 대한 需要를  $D_1, D_2, D_3$ 로 늘려갈 때 이에 대응하는 輸出은  $Q_1, Q_2, Q_3$ 로 증가할 터인데, 가령 雇傭量  $L_3$ 가  $L_0$ 에 미치기 전에  $Q_3$ 가  $Q_0$ '보다 커져서 輸出價格이  $P_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 즉 剩餘人力을 製造業이 다 흡수 못한 상태에서 比較優位 1位 財貨의 輸出로 얻는 利潤이 하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 나라 剩餘人力의 크기에 비해 世界市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剩餘人力을 製造業部門 고용으로 消盡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比較優位 2位の 財貨를 輸出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도 剩餘人力이 소진되지 않는다면 比較優位가 더 낮은 財貨를 輸出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의 관심은 東아시아 經濟의 工業化 과정에 世界市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에 있는데, 위의 논의는 世界市場의 크기가 工業化의 難易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要因임을 보여준다. 工業化란 製造業部門의 生産과 고용이 늘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世界市場이 위에서 논의한 의미에서 국내 剩餘人力에 비해 相對的으로 큰 경우에 工業化가 진전되기 위해 일어나야 할 일이란 단지 製造業部門의 資本스톡이 증대하는 것이다. 資本스톡의 增大는 勞動人力에 대한 需要增大로 이어지고, 이 需要增大는 剩餘人力에 의해 쉽사리 충족될 것이기 때문

이다. 동일한 財貨의 既存 生産方式을 단순 모방함으로써 生産增大와 雇傭增大가 가능하며, 剩餘人力을 製造業部門에서 흡수하는 데에 걸리는 期間은 投資를 통하여 資本스톡을 增大하는 데 요구되는 期間이다.

이에 비해 世界市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는 하나의 財貨를 수출하는 데에 製造業部門이 고용하고 흡수하는 人力이 剩餘人力에 비해 작으므로 製造業部門의 生産과 雇傭이 增大되려면 比較優位가 점점 낮은 産業으로 生産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比較優位 1位에서 2位로, 2位에서 3位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2節의 式 (1)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輸出을 통해 購買力 한 단위를 얻는 데 더 큰 資源費用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고, 比較優位가 낮은 産業일수록 世界市場에서 競爭力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輸出競爭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따른다. 無限勞動供給 經濟는 勞動 이외 生産要素의 賦存이 빈약한 경제인데, 바로 賦存이 빈약한 物的 혹은 人的資本 및 기타 資源의 集約도가 높은 産業의 生産을 增大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같은 규모의 剩餘人力을 가지고 있는 開途國이라도 世界市場의 規模가 큰 경우에는 그 나라의 工業化는 단순 모방하는 事業家가 많더라도 순조로히 진행될 수 있고 所要되는 기간도 짧을 것이나 世界市場의 規模가 작은 경우에는 「슈페터」流의 革新을 일으키는 企業家가 나타나 새로운 産業을 시작해야 生産과 雇傭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界市場 規模가 크다는 것은 國內 資源賦存의 側面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企業經營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工業化를 비교적 수월하게 하고 加速하는 要因이 된다.

#### 4. 國際分業 依存的 NICs 成長의 特徵

지금까지의 논의는, 世界市場이 충분히 크다면 無限勞動供給의 여건 아래 剩餘人力の 존재가 工業化를 수월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剩餘人力이 消盡되더라도 工業化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겠으나 中斷되지는 않을 것이다. 剩餘人力の 消盡으로 工業化가 시작된 產業에서의 生産增大가 어려워지는 반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工業化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게 하는 與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無限勞動供給 아래 어느 輸出產業 X에서 생산증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產業의 생산에 투입되는 中間財에 대한 需要가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消費者들의 所得이 그만큼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所得彈力性이 높은 財貨와 서비스에 대한 需要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剩餘人力の 消盡은 賃金 上昇을 의미할 것인데, 이것은 물론 위에서 논의한 대로 수월한 工業化의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要因이지만 동시에 勞動節約的 生産技術과 그를 위한 投資에 대한 需要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開放은 世界市場의 需要를 經濟 안에 도입함으로써 比較優位가 높은 產業에서 첫 단계의 ‘無限勞動供給’下的 生産증대를 일으키는데, 이는 그 產業의 成長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산업에서 ‘無限勞動供給’下的 生産增大를 일으킬 것이다. 가령, 開放으로 인해 X產業이 팽창하고 이 팽창이 Y產業의 財貨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需要를 창출한다 할 때, 이 產業 Y는 勞動에 대한 需要를 새로이 증가시킬 것인데, 이 勞動需要의 增加는 첫 단계 無限勞動供給下的 生産 및 勞動需要에 관한 위의 논의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無限勞

動供給下の 勞動에 대한 需要增加는 開放後 投資增大에 緣由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産業 Y의 勞動에 대한 새로운 需要增加는 開放의 效果로 Y産業의 財貨와 서비스에 대해 새로이 창출된 需要增加에 緣由하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剩餘人力の 消盡에 따라 높아진 賃金水準은 아직 Y産業이 發하는 勞動需要를 반영하지 않는 水準이다. 따라서 利潤의 기회가 새로이 생긴 産業 Y의 입장에서 보면, 그 産業이 發하는 勞動에 대한 需要增加가 經濟 전체의 賃金水準을 높일 때까지,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無限勞動供給’이 존재하는 셈이다. 經濟의 나머지 部門에 ‘剩餘人力’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파급효과와 폭과 속도는 단계가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外生要因에 의해 경제가 무한팽창한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이 연쇄작용의 끝까지를 하나의 開放의 효과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開放의 효과를 一過性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一過性 開放의 效果가 사라진 다음에는 開放되어 있는 經濟와 閉鎖된 經濟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開放經濟는 世界市場 規模의 증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나 閉鎖經濟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하다. 그뿐 아니라, 對內的으로 일어나는 與件 변화도 開放經濟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위에서 논의한 임금상승은 資本蓄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資本蓄積 자체가 賦存資源의 與件的 변화이다. Rybczynsky 定理이 말해주듯이<sup>22)</sup>, 財貨의 世界市場 價格이 주어졌다면, 資本스톡의 증가는 資本集約도가 높은 財貨의 輸出을 늘리고 資本集約도가 낮은 財貨의 輸出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즉 위에서 말한 開放의 一過性 效果가 對內與件을 변화시킴으로써 比較優位의 構造를 바꿀 것이고 이는 다시 주어진 經濟에게 새로운 國際分業의 기회를 주는

22) Rybczynski(1955).

것이다. 이것은 물론 閉鎖經濟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다.

이것이 NICs 工業化의 주된 줄거리라면, 이는 先進國의 工業化 경험과 크게 다른 것이다. 世界市場의 규모가 매우 커졌다는 것이 이 章이 前提로 삼고 있는 점이지만, 이 점은 여지껏 논의하지 않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世界市場에서의 販賣의 性格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先進國의 경우에 輸出은 市場 確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반면, NICs의 경우에는 競爭力 確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先進國들이 輸出에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넓지 않은 世界市場에서 어떻게 販路를 확보하느냐였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植民地 擴大라는 帝國主義의 길을 걸었던 중요한 경제적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비해, NICs의 경우 輸出이 당면하는 과제는 커다란 世界市場은 存在하는데 어떻게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競爭力이 있다면 販路 확보는 큰 어려움이 아닌 것이다.<sup>23)</sup> 또 하나의 매우 근본적인 차이는, NICs의 工業化에서 輸出競爭力은 풍부한 勞動力에서 생기는 것이고 物的·人的資本은 輸入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영국의 初期 工業化에서의 輸出競爭力은 다른 나라에 비해 科學技術 수준이 높고 物的 혹은 人的資本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差異 때문에 NICs의 工業化는 初期의 工業化와 다른 特徵을 지니고 있다. 첫째, NICs의 工業化 과정이 先進國보다 不均衡이 심하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이 공업화 초기에 있을 때 당시 수출산업이었던 紡織 및 紡績產業이 필요로 하는 資本財나 中間投入材를 國內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資本集約的 產業도 技術集約的 產業도 병행해서 발전하여야 한다. 다른 先進國들의 경우에도 工業化 당시의 世界市場의 규모가 작고 따라서 特化의 정도

23) 개별 經濟에게는 競爭力만 있으면 生産規模 혹은 能力(capacity)의 規模가 市場에 비해 너무 큰 것인지 興否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世界 전체에는 공급과잉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나라의 工業化는 少數 輸出産業의 팽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NICs보다는 더 균형 있는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NICs의 경우에는 資本財와 中間財를 國內生産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工業化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어서도 資本財, 中間財 産業들의 發展이 先進國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다른 특징을 낳는다. 즉 NICs는 高速成長 初期에는 國際收支 赤字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勞動을 제외하고 輸出品生産에 投入되는 資本財, 中間財, 原料 등등을 거의 전부 輸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資本財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년동안 輸出品生産에 기여하는 價値보다 높은 價格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資本財 輸入은 초기의 輸入을 輸出보다 크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NICs의 高速成長이 시작하는 초기에는 國際收支 赤字를 경험하게 된다.

巨視經濟적으로 보더라도 經常收支 赤字는 投資의 國內貯蓄 超過分과 같은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投資가 國內貯蓄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려면 經常收支가 赤字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無限勞動供給이 존재하는 동안 비교적 수월한 工業化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에 요구되는 投資增大를 위한 資金이 調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投資資金이 國內貯蓄으로 調達될 수밖에 없다면 이 수월한 工業化도 그 速度가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관심의 초점은 NICs 工業化가 어떻게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있는데, 여기에 언급한 特徵들은 그 질문에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무슨 理由 때문이든지 NICs들이 그 工業化 과정에서 國內에서 生産된 資本財, 中間財, 工業用 原料 등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資本 및

技術의 蓄積에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이고 世界市場에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輸出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 결과 輸出增大와 그로 인한 製造業部門의 成長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高速成長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原料, 資本財, 中間財 들의 輸入으로 인한 不均衡 成長과 國際收支 赤字가 NICs 高速成長의 잘못된 政策의 결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高速成長을 가능하게 만든 原因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IV. 實證分析

### 1. 工業化의 操作的 定義

앞 章까지의 논의는 世界市場의 규모가 클수록 개방된 경제의 工業化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매우 간단한 假說을 제기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世界市場의 규모는 영국의 産業革命 이후 점점 커져왔으므로, 이 章에서는 여러 나라의 경험에서 工業化 당시의 世界市場 規模와 工業化 速度와의 사이에 실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같은 實證分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현상을 ‘工業化’라고 부를 것인가, 또 工業化의 速度는 무슨 變數로 나타낼 것인지 등에 관한 操作的(operational) 定義를 내려야 한다.

‘工業化’라는 말은 잘 定義된 概念이 아니다. ‘先進工業國(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혹은 industrial countries)’, ‘新興工業國(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등의 쓰임에서 볼 때, 工業化란 대체로 農業 위주의 침체된 경제가 製造業을 비롯한 여타

産業의 비중이 높고 활력 있는 經濟로 바뀌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Kuznets(1966)가 近代經濟成長(*Modern Economic Growth*)이라고 부른 현상으로, 總勞動力 가운데 農業部門 종사자의 比重이 줄고 農業部門의 生産이 國內 혹은 國民總生産 가운데 차지하는 比重 또한 줄어드는 한편 製造業과 餘他産業들의 종사자 및 생산의 比重이 增加하는 것이다.

우리 經濟의 工業化 경험에서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總就業者 가운데 農林水産業 종사자의 비중이 68.3%에서 18.3%로 떨어졌으며, 製造業 종사자의 비중은 10% 미만(1960년의 추정치가 불명확)에서 26.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에 國內總生産 중의 비중은 農林水産業이 36.9%에서 9.1%로 하락하고 製造業의 비중은 13.6%에서 29.2%로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工業化’의 操作的 定義를 내릴 때 産業別 종사자 比重의 변화 혹은 國民總生産에 대한 産業別 寄與의 변화에 근거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統計를 현재의 先進國들이 工業化하기 시작하는 19世紀 前半부터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國民總生産의 추정은 있으나 産業別 寄與로 나누어놓은 추정은 얻을 수 없었다. 勞動力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 이외에는 각국의 産業의 定義가 일치하지 않아서 ‘工業(industry)’ 혹은 ‘製造業(manufacturing)’의 종사자에 관한 통계를 하나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얻는 것이 어려웠다. 농림수산업의 勞動統計는 이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여러 나라에 관하여 각 나라의 工業化 初期부터 종사자의 통계를 얻는다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工業化’를 定義하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인력의 50%선에서 20%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工業化’의 操作的 定義로 사용하였다.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을 사용한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임에 틀림없으나, 어느 나라의 工業化過程에서든지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줄고 製造業 종사자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工業化된 경제라면 그 과정에 있었던 농림수산업 종사자 比重의 하락은 製造業 比重 增加의 신빙할만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50%인 때를 工業化의 시작연도로 삼은 것은, 實證分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나라의 수를 되도록 많이 하기 위한 것이다. 工業化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미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50%를 공업화가 이루어진 기간의 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 가령 66%선이 언제였는지 알 수 있는 나라의 數가 불과 몇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工業化 경험을 돌이켜볼 때 농림수산 종사자의 比重이 50%이면 工業化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인데, 이 점이 實證分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농림수산 종사자의 비중이 50%인 時點부터 20%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의 期間이 工業化 기간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농림수산 종사자의 비중이 66%인 시점을 공업화의 시작이라 할 때, 그때부터 5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과 50%부터 20%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문제이다. 가령, 世界市場 規模 增加의 영향이 前者의 기간에는 工業化를 遲延시키는 반면 後者の 기간에는 加速시키는 것이라면, 後者에 관한 實證分析 결과를 가지고 工業化 전반에 걸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의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경우에도 이 實證分析은 단지 工業化의 全期間이 아니라 工業化 기간 가운데 나중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 2. 資 料

여하튼 위에서 언급한 工業化의 操作的 定義에 따라 工業化 期間을 설정할 수 있는 나라는 19개국이었었는데, 그 期間을 [그림 5]에 모아놓았다.<sup>24)</sup> 이 나라들의 選定 기준에 관하여는 附錄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共產主義 국가가 아니면서 총인구가 1백만명 이상이고 1990년대 초에 농업부문 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20% 미만이며 製造業部門 종사자가 15%를 넘는 나라들로서 통계치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모두 포함하고 있다. 共產主義 국가들을 제외한 것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經濟現象은 計劃經濟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 1백만명 이하의 나라를 제외한 것은 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經濟單位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콩의 인구는 5백만명이 넘고 싱가포르는 2백만명이 넘어도 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經濟單位로 보기에 너무 작다는 견해를 가진 이들이 많다. 製造業部門 종사자가 1990년대 초에 15%를 넘는 나라들만을 포함시킨 것은, 이 글이 工業化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農林水産部門 종사자의 감소는 製造業部門의 팽창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끔 서비스部門의 팽창에 수반하는 일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기준 때문에 제외된 국가로 西印度의 바베이도스(Barbados)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나라의 數는 20개국에도 못미친다. 아프리카 大陸에서는 한 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中南美에서도 단지 베네수엘라만이 포함되어 있을 따름이다. 실제로는 위의 기준으로 工業化되었는데 統計가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資料를 얻기 위해 統計를 뒤져보면서 받은 心證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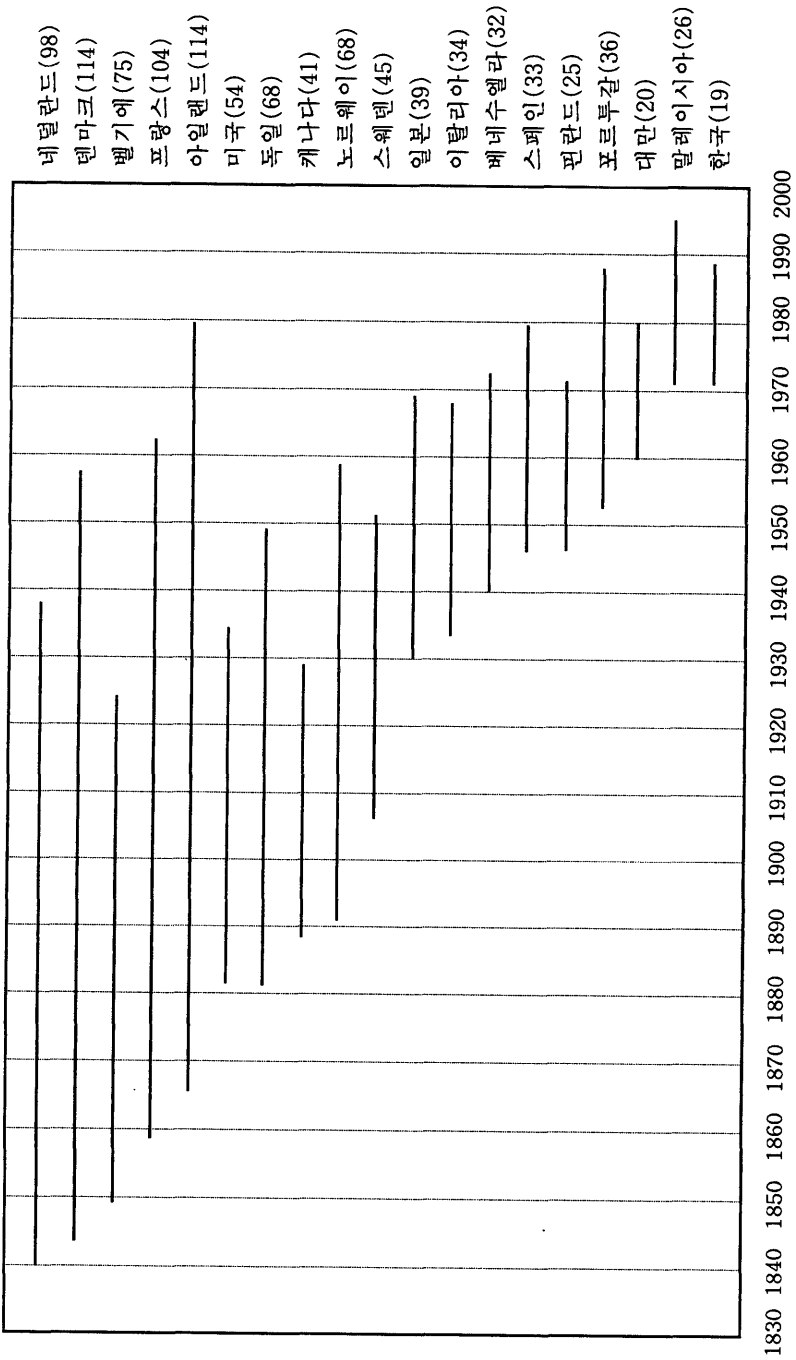
24) 여기에 사용된 勞動統計는 ILO(1995)에서 얻었다. 따라서 이 글의 實證分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3년 이후에 總勞動人力 가운데 농수산업 종사자의 比重이 20% 이하로 떨어진 나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 기준이 요구하는 비교적 간단한 統計가 없는 나라는 실제로 工業化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中南美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는 俸給 勤勞者들의 統計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외된 나라들이 많았는데, 이 나라들의 경우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統計를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여기에서 사용된 기준으로 工業化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브라질은 위의 기준으로 工業化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지만 일부 지방에 관한 통계가 없어 결국 나라 전체의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統計値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였다. 世界市場이 크다고 해서 한 經濟가 자동적으로 高速成長하는 것은 아니다. 世界市場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世界市場과 交流가 없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世界市場의 工業化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글의 實證分析에 世界市場과 交流가 없는 채 工業化한 나라는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인 문제거리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資料를 구할 수 있었던 19개국들을 살펴볼 때 世界市場과의 상당한 정도의 교류 없이 현재에 이른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世界市場과의 交流 없이 工業化한다는 것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여기 포함된 西歐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국가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예외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인데, 이들의 工業化는 統計値를 얻을 수 있기 시작했을 때에 이미 너무 진전되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比重이 언제 50%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림 5]는 資料를 구할 수 있었던 19개국의 工業化 경험을 보여 주는데, 1840년 이후 1990년까지 약 150년 동안 工業化에 所要되는 期間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그림에 포함된 國家로서 맨 처음 工業化를 시작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세 나라의 평균 所要期間

[그림 5] 工業化 所要期間



〈표 2〉 19개국의 工業化 經驗

| 變數 및 單位<br>國名 | 工業化 始終年度     | 工業化 所要期間 (T) | 成長率 (RY) | 世界總輸出 (W)    | 人口 1,000名當 世界總輸出 (W/N) | 世界總輸出 增加率 (RW) | 人口增加率 (RN) |
|---------------|--------------|--------------|----------|--------------|------------------------|----------------|------------|
|               |              | 年            | %        | 1990년 不變 億달러 | 1990년 不變 1만달러          | %              | %          |
| 1. 네덜란드       | (1840, 1938) | 98           | 2.23     | 139          | 487                    | 3.20           | 1.14       |
| 2. 덴마크        | (1843, 1957) | 114          | 2.41     | 169          | 1,188                  | 3.17           | 1.02       |
| 3. 벨기에        | (1849, 1924) | 75           | 2.00     | 229          | 518                    | 3.26           | 0.75       |
| 4. 프랑스        | (1858, 1962) | 104          | 1.72     | 311          | 84                     | 3.14           | 0.23       |
| 5. 아일랜드       | (1865, 1979) | 114          | 1.25     | 445          | 1,082                  | 3.52           | -0.18      |
| 6. 미국         | (1880, 1934) | 54           | 2.62     | 792          | 157                    | 2.23           | 1.72       |
| 7. 독일         | (1881, 1949) | 68           | 1.77     | 815          | 318                    | 2.25           | 0.96       |
| 8. 캐나다        | (1888, 1929) | 41           | 3.91     | 1,023        | 2,126                  | 2.93           | 1.87       |
| 9. 노르웨이       | (1891, 1959) | 68           | 2.86     | 1,115        | 5,541                  | 2.62           | 0.84       |
| 10. 스웨덴       | (1906, 1951) | 45           | 2.65     | 1,813        | 3,410                  | 1.86           | 0.64       |
| 11. 일본        | (1930, 1969) | 39           | 5.40     | 3,120        | 486                    | 3.77           | 1.23       |
| 12. 이탈리아      | (1933, 1968) | 35           | 4.02     | 2,515        | 602                    | 4.56           | 0.67       |
| 13. 베네수엘라     | (1940, 1972) | 32           | 6.59     | 3,151        | 8,134                  | 5.36           | 3.42       |
| 14. 스페인       | (1946, 1979) | 33           | 5.23     | 3,515        | 1,301                  | 5.87           | 0.97       |
| 15. 핀란드       | (1946, 1971) | 25           | 4.77     | 3,515        | 9,235                  | 6.03           | 0.77       |
| 16. 포르투갈      | (1952, 1988) | 36           | 4.62     | 4,176        | 4,877                  | 5.74           | 0.40       |
| 17. 대만        | (1960, 1980) | 20           | 9.70     | 7,010        | 6,284                  | 6.10           | 2.32       |
| 18. 말레이시아     | (1969, 1995) | 26           | 7.20     | 13,233       | 13,037                 | 5.15           | 2.67       |
| 19. 한국        | (1970, 1989) | 19           | 8.83     | 14,460       | 4,530                  | 4.48           | 1.50       |

은 약 96년인 데 비해 가장 최근에 工業化를 이룬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 세 나라의 所要期間은 평균 약 22년이다.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比重이 50%에서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데 所要되는 期間이 그동안 1/4보다도 더 짧게 단축된 것이다. 이것이 큰 흐름이고, 개별 국가의 經驗에 있어서는 특수한 對內外 輿件 때문에 큰 흐름에 비해 所要期間이 더 길거나 짧은 나라들도 있다. 가장 대표



적인 경우는 아일랜드로, 工業化의 시작이 주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이른 것도 아닌데 그 ‘終了’가 1980년에나 이루어졌고, 그 결과 所要期間이 그림에 포함된 19개국 가운데 가장 긴 114년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所要期間은 비교적 짧다는 인상이고 프랑스는 비교적 길다는 인상이다. 西歐 국가들의 경우에는 世界 1次 및 2次大戰이 工業化 期間을 늘리는 데 기여했을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2次大戰의 영향으로 工業化 期間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앞 章의 論議가 제기하는 假說을 [그림 5]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實證分析을 시도하였는데, 그에 사용된 하나의 觀測值는 한 나라 工業化의 經驗이고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네덜란드를 예로 설명하면, 국가명 오른쪽 첫째 열은 工業化의 시작연도가 1840년이었고 끝연도가 1938년이었음을 보여주고, 둘째 열은 그 工業化에 所要된 기간의 길이가 98년이었음을, 셋째 열은 이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平均 經濟成長率이 2.23%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工業化 所要期間과 成長率은 아래 설명하는 回歸分析에 從屬變數로 쓰였다.

다음 列들은 獨立變數들의 觀測值를 보여주는데, 넷째 列은 네덜란드의 工業化가 시작되었던 1840년의 世界總輸出이 1990년 不變 달러로 139억달러였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列은 工業化 시작연도의 世界總輸出을 같은해 해당 국가의 人口로 나눈 比率을 보여주고 있는데, 1840년 世界總輸出은 네덜란드 人口 千名當 약 487만달러의 규모였다. 여섯째 列은 네덜란드가 工業化하는 동안 世界總輸出의 平均 增加率이 3.2%였음을, 일곱째 列은 같은 기간 동안 그 나라의 人口 增加率이 평균 1.14%였음을 보여준다.

이 觀測值들은 거의 모두 다 既存에 간행된 資料에서 얻은 것이나 少數는 이 글에서 ‘推定’한 것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의 工業化 시작 연도의 國民總生産과 人口가 그러

하고, 2次大戰의 前後 몇년 동안의 世界總輸出도 그러하다. 이들은 Maddison(1995)에서 얻은 다른 年度의 資料를 단순히 直線延長함으로써 ‘推定’하였다. 이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은 附錄으로 미룬다.

### 3. 回歸方程式 推定 및 結果

이 觀測值들을 사용하여 앞 章의 論議에서 제기된 假說, 즉 世界市場의 규모가 클수록 工業化의 速度가 빠르다는 假說을 檢證해본 結果가 <표 3>과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檢證의 方法으로 간단한 普通最小自乘法을 따라 回歸方程式을 推定하였다. 첫째와 둘째 推定式은 둘 다 <표 2>의 둘째 列에 있는 ‘工業化 所要期間’의 自然對數를 從屬變數로 삼은 것인데, 첫째 推定式은 아래와 같다.

$$\ln T = a_0 + a_1 \ln W + a_2 RW \quad (4)$$

여기서 觀測值를 표시하는 下添字와 攪亂項은 생략하였으며,  $T$ 는 工業化 所要期間,  $W$ 는 <표 2>의 넷째 列의 ‘世界總輸出’,  $RW$ 는 여섯째 列에 있는 工業化 期間 동안의 ‘世界總輸出 增加率’을 뜻한다.

$W$ 는 각 나라마다 工業化가 시작되는 時點의 世界市場 規模를 대표하는 變數로서, 앞 章에서 논의한 假說은  $W$ 가 크면 클수록 工業化에 所要되는 期間을 단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 回歸係數  $a_1$ 은 負(-)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RW$ 는 주어진 時點의 世界市場 規模  $W$ 와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데, 世界市場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工業化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그 回歸係數  $a_2$  역시 負(-)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3>에 나타난 推定結果를 보면 두 獨立變數의 계수는 모두 期待된 바와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었는데,

〈표 3〉 回歸式 推定結果, 從屬變數 = 工業化 所要期間( $\ln T$ )

| 獨立變數   | 回歸係數<br>期待符號   | 式 (4) 推定 |       |            | 式 (5) 推定 |       |            |
|--|----------------|----------|-------|------------|----------|-------|------------|
|  |                | 推定值      | t-값   | 有意度<br>(%) | 推定值      | t-값   | 有意度<br>(%) |
| 常數   |                | 8.272    | 18.16 | 0.0        | 5.69     | 11.52 | 0.0        |
| 世界總輸出<br>( $\ln W$ , 1990년<br>不變 1억달러)                 | $a_1 < 0$      | -0.354   | -7.69 | 0.0        |          |       |            |
| 人口 1,000名當<br>世界總輸出<br>( $\ln W/N$ , 1990년<br>不變 1만달러) | $b_1 < 0$      |          |       |            | -0.147   | -1.83 | 8.57       |
| 世界總輸出<br>增加率 ( $RW$ , %)                               | $a_2, b_2 < 0$ | -0.053   | -1.15 | 26.8       | -0.193   | -2.31 | 3.48       |
| $\bar{R}^2$  |                | 0.870    |       |            | 0.496    |       |            |

$\ln W$ 의 계수는 거의 0%水準에서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RW$ 의 계수는 有意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推定式은 첫째의 變形으로, 從屬變數는 같고 두 개의 獨立變數 가운데 世界總輸出 대신에 〈표 2〉의 다섯째 列의 ‘人口 1,000名當 世界總輸出’을 獨立變數로 사용한 것이다. 世界市場 規模를 이처럼 人口에 對比한 상대적인 變數로 나타낸 것은, 世界市場과 剩餘人力의 상대적 크기를 重視한 앞 章의 論理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이 推定式은

$$\ln T = b_0 + b_1 \ln \frac{W}{N} + b_2 RW \quad (5)$$

이고, 여기서 ( $W/N$ )은 ‘人口 1,000名當 世界總輸出’을 뜻한다. 이

推定式에서도 두 獨立變數의 계수는 모두 期待된 바와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W/N$ 은 10% 수준에서  $RW$ 는 5% 수준에서 有意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표 4〉에 보고되어 있는 두 推定式에서는 工業化 期間의 平均 經濟成長率을 從屬變數로 삼았다. 위에서는 工業化 所要期間에 관심이 있었는데 비해 여기서는 經濟成長의 速度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獨立變數로는, 셋째 式에서는 첫째 式에서 사용된 두 變數, 世界總輸出  $W$ 와 그 增加率  $RW$ 에 工業化 期間의 平均 人口增加率을 추가하였다. 셋째 推定式은

$$RY = \alpha_0 + \alpha_1 W + \alpha_2 RW + \alpha_3 RN \quad (6)$$

이며, 여기서  $RY$ 는 해당 국가의 工業化 期間中 平均 經濟成長率이고  $RN$ 은 平均 人口增加率이다. 이 推定에서도 檢證할 假說의 핵심은  $W$ 의 영향이며 여기서는 成長率  $RY$ 에 미치는 영향이다. 世界市場이 크다는 것은 [그림 4]의 첫째 조각에서 需要曲線이 ‘無限’ 彈力性을 가지는 區間이 길다는 것인데, 이는 앞 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無限勞動供給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開途國에서는 勞動集約的 產業에 대한 投資誘因이 강하게 작용하고 工業化가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W$ 가 클수록 開途國은 工業化 과정에서 높은 成長率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계수는 正(+)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독립적으로, 世界 需要의 增加  $RW$ 도 成長率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계수의 값도 零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成長率  $RY$ 의 說明變數로  $RN$ 을 추가하면 推定式은 成長要因分析(growth accounting)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經濟의 生産函數를 時間에 관하여 微分함으로써, 成長率을 生産要素 投入의 增加率들의 加重平均으로 나타낼 수 있다(周知

하는 바와 같이 이 加重平均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生産性 增加로 부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RN$ 이 獨立變數로 쓰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W$  및  $RW$ 가 왜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推定式은 成長要因分析과 無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成長要因分析은 成長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說明하자는 것이다. 勞動의 投入이 說明하는 成長이 얼마이고, 資本의 投入이 說明하는 成長은 얼마이고, 生産要素 투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얼마이고 등등이다. 이에 비해 위의 推定式이 資本의 投入 대신에 世界市場 規模와 그 增加率을 대표하는 變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資本投入이 이루어지도록 이끈 要因에 대한 檢證이라고 할 수 있다. 成長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왜’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자는 것이다. 물론 資本投入에 대한 統計資料를 여기의 回歸分析에 포함된 期間에 관하여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資料가 있다고 하여도 이 글의 목적을 위해서는  $W$ 와  $RW$ 를 獨立變數로 사용하는 것이 알맞는 일이다.

넷째 推定式은 다음과 같다.

$$RY = \beta_0 + \beta_1 \frac{W}{N} + \beta_2 RW + \beta_3 RN \quad (7)$$

이는 셋째 式의 變形으로 世界總輸出 대신에 ‘人口 1,000名當 世界總輸出’  $W/N$ 을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世界市場과 剩餘人力의 상대적 크기를 重視한 앞 章의 論理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표 4>에 나타난 推定結果를 보면 推定式 (6)의  $W$ ,  $RW$ ,  $RN$ 의 계수들은 모두 기대하였던 대로 正(+ )의 값을 가지고 1% 미만에서 統計學的으로 有意하였다. 推定式 (7)에서도 세 獨立變數들의 계수들이 모두 기대되는 부호를 가졌으나,  $RW$ 와  $RN$ 의 계수는 1% 정도의 수준에서 有意한데  $W/N$ 의 계수는 전혀 有意하지 않았다.

〈표 4〉 回歸式 推定結果, 從屬變數 = 工業化 期間中 成長率(RY)

| 獨立變數   | 回歸係數<br>期待符號            | 式 (6) 推定 |       |            | 式 (7) 推定 |       |            |
|--|-------------------------|----------|-------|------------|----------|-------|------------|
|  |                         | 推定值      | t-값   | 有意度<br>(%) | 推定值      | t-값   | 有意度<br>(%) |
| 常數   |                         | -0.338   | -0.48 | 64.02      | -1.284   | -1.17 | 25.9       |
| 世界總輸出<br>(W, 1990년 不變<br>1억달러)                 | $\alpha_1 > 0$          | 2.94E-06 | 4.40  | 0.05       |          |       |            |
| 人口 1,000名當<br>世界總輸出<br>(W/N, 1990년<br>不變 1만달러) | $\beta_1 > 0$           |          |       |            | 3.48E-05 | 0.28  | 78.44      |
| 世界總輸出<br>增加率(RW, %)                            | $\alpha_2, \beta_2 > 0$ | 0.634    | 3.43  | 0.37       | 0.965    | 3.35  | 0.44       |
| 人口增加率<br>(RN, %)                               | $\alpha_3, \beta_3 > 0$ | 0.892    | 3.17  | 0.63       | 1.281    | 2.83  | 1.26       |
| $\bar{R}^2$                                    |                         | 0.856    |       |            | 0.672    |       |            |

이 추정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世界市場 規模는 앞 章에서 論議한 뜻에서 剩餘人力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클 경우에는, 주어진 經濟는 比較優位 1位 財貨에 대한 世界의 需要가 無限 彈力性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輸出을 위한 生産에 剩餘人力이 완전히 消盡될 것이다. 世界市場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에는 剩餘人力이 완전히 消盡되기 전에 世界市場의 그 財貨에 대한 需要가 無限 彈力性을 잃고 世界市場 價格이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前者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先進國들이 工業化하던 시기보다는 NICs들이 工業化하던 시기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

世界市場 규모가 그 사이에 100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래에 와서, 한 交易財만을 수출한다는 뜻에서 ‘完全特化’의 사례나 혹은 그에 가까운 사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實證分析에서 世界市場 規模가 工業化 速度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檢證되지 않을 것이며, 工業化의 速度는 剩餘人力의 규모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즉 剩餘人力의 규모가 크면 工業化가 더 長期가 所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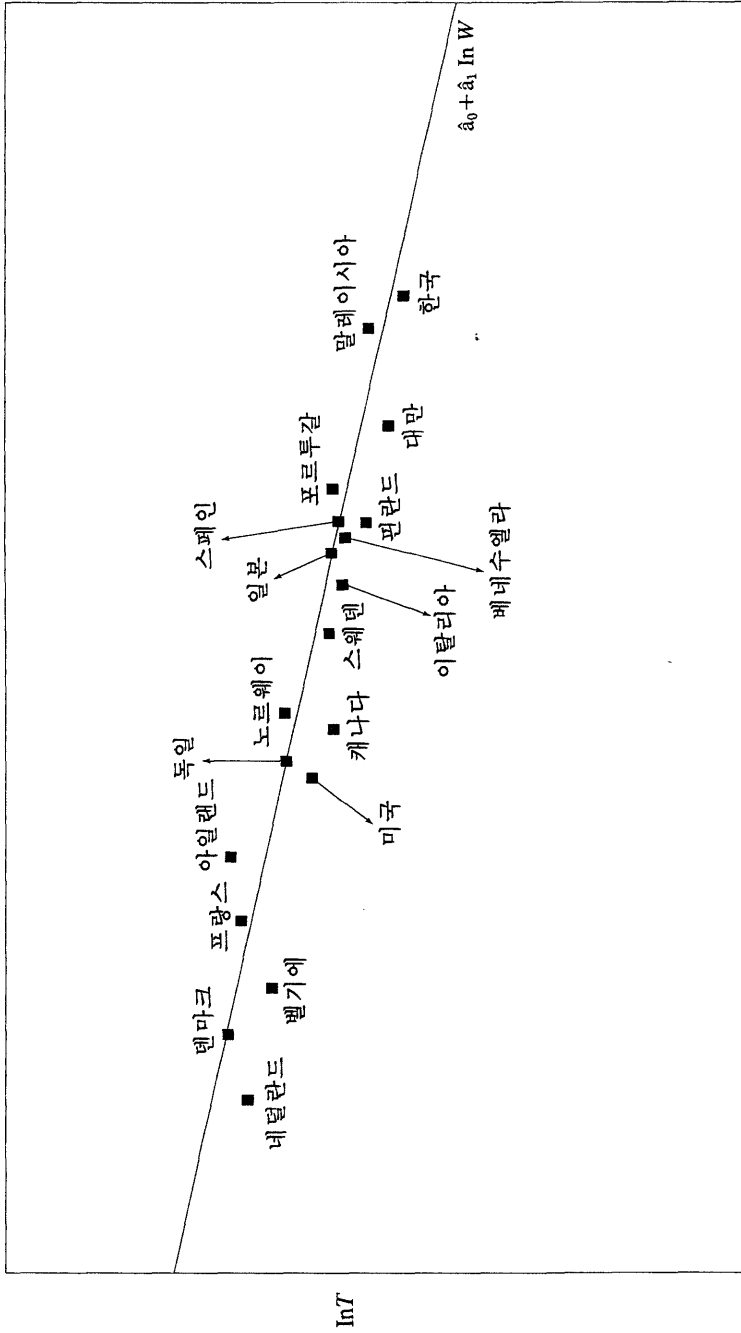
반면에 後者の 경우 世界市場은 特化에 대한 하나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한다. 世界需要가 無限 彈力性を 보이는 區間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比較優位 1位 財貨의 輸出을 통한 수월한 工業化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다음 順位 比較優位 產業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世界市場 규모가 매우 有效한 制約要因이라면, 주어진 경제의 剩餘人力 혹은 人口의 크기가 工業化의 速度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표 3>에 보고되어 있는, 工業化 所要期間을 從屬變數로 하는 式 (4)의 推定 結果에서  $\ln W$ 의 係數는 統計學的 有意度가 0% 수준에서 추정되고 式 (5)의  $\ln(W/N)$ 의 係數는 10% 수준의 有意性を 보이는 것은 世界市場이 하나의 중요한 制約要因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로 剩餘人力이나 人口의 영향에 관하여 크기가 클수록 工業化 速度를 늦추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같은 판단은 <표 4>에 보고되어 있는, 經濟成長率을 從屬變數로 하는 式 (6) 및 (7)의 推定 結果에 의해 다시 확인된다. 여기서도  $W$ 의 係數는 有意度가 0.05%였고  $W/N$ 는 전혀 有意하지 않았다.

[그림 6]은 式 (4)의 推定結果에 기초하여 世界市場 規模를 나타내는 世界總輸出이 工業化 所要期間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는, 式 (4)의 推定에서  $\hat{\alpha}_2 RW$ 를 제외한 나머지, 즉  $\hat{\alpha}_0 + \hat{\alpha}_1 \ln W$

[그림 6] 工業化 所要期間에 대한 世界市場 規模의 영향



$\ln W$



〈표 5〉 實際 및 推定 工業化 所要期間

(단위 : 年)

|       | 실제 工業化<br>所要期間<br>(a) | 推定 工業化<br>所要期間<br>(b) | 差異<br>(a) - (b) |
|-------|-----------------------|-----------------------|-----------------|
| 네덜란드  | 98                    | 113.08                | -15.08          |
| 덴마크   | 114                   | 105.64                | 8.36            |
| 벨기에   | 75                    | 94.39                 | -19.39          |
| 프랑스   | 104                   | 85.26                 | 18.74           |
| 아일랜드  | 114                   | 73.53                 | 40.47           |
| 미 국   | 54                    | 64.18                 | -10.18          |
| 독 일   | 68                    | 63.48                 | 4.52            |
| 캐나다   | 41                    | 56.51                 | -15.51          |
| 노르웨이  | 68                    | 55.72                 | 12.28           |
| 스웨덴   | 45                    | 48.82                 | -3.82           |
| 일 본   | 39                    | 36.43                 | 2.57            |
| 이탈리아  | 35                    | 37.74                 | -2.74           |
| 베네수엘라 | 32                    | 33.40                 | -1.40           |
| 스페인   | 33                    | 31.29                 | 1.71            |
| 핀란드   | 25                    | 31.02                 | -6.02           |
| 포르투갈  | 36                    | 29.64                 | 6.36            |
| 대 만   | 20                    | 24.21                 | -4.21           |
| 말레이시아 | 26                    | 20.32                 | 5.68            |
| 한 국   | 19                    | 20.40                 | -1.40           |

를 實線으로 보여주고, 推定 결과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고유한 殘差를 이 實線에 加減함으로써 한 나라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 5〉에는 각 나라가 실제 경험한 工業化 所要期間, 推定式 (4)가 예상하는 推定된 所要期間, 그리고 그 差異를 보여준다. 이 그림과 표를 살펴보면 ‘東아시아의 奇蹟’이라는 표현은 사실을 정확히 捕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 節에서, 이 글의 操作的 定義에 의하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세 나라의 평균 工業化

所要期間은 약 96년인 데 비해 가장 최근에 工業化를 이룬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등 세 나라의 所要期間은 평균 약 22년이었음을 보았는데 이같은 所要期間의 短縮이 ‘東아시아의 奇蹟’의 실체라면, [그림 6]과 <표 5>는 그것이 거의 전부 世界總輸出의 규모가 커졌다는 데 그 理由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世界市場 規模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의 成長經驗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의 成長經驗보다 더 ‘奇蹟’이라고 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推定된 回歸方程式이 예상하는 것보다 工業化 所要期間을 19년 이상 단축시킨 벨기에나 15년 이상 단축시킨 캐나다의 成長經驗이 더 ‘奇蹟’이라 할만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工業化에서는 推定式이 예상하는 所要期間보다 1年餘 短縮된 데 불과하였다.

## V. 結 論

영어 속담에 “먹여주는 손을 깨물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먹여주는 손을 물면 배를 곯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 하는 말이겠지만 한 나라의 경우에도 경청해야 할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東아시아의 新興工業國들이 高速成長했던 理由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먹여주는 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깨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高速成長의 理由를 알아야 그것을 가능하게 한 要因을 다치지 않게 保全하고 더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II章에서는 高速成長의 理由에 관하여 新古典 經濟學의 설명과는 상반된 見解를 가지고 있는 修正主義를 살펴보았다. 新古典 經濟學은 價格歪曲 最小化, 市場 作動原理에의 依存 및 國際分業에의 참여를 핵심적인 이유로 보는 데 비해, 修正主義는 東아시아 國家들

의 經濟政策에서 高速成長의 이유를 찾으려 하였다. 修正主義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Amsden流는 政府에 의한 賃金, 金利, 換率 등 價格의 의도적 歪曲과 政府支援을 받은 受惠企業으로부터 반대급부로 實績을 받아낼 수 있었던 政府介入이 高速成長의 原因이라고 주장한다. World Bank流는 貯蓄率 提高, 人的資本 擴充, 건전한 巨視經濟運營, 價格歪曲 回避 등이 成長에 도움이 되는 要因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일반론에 있어서는 新古典 經濟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 대만, 일본의 경우에는 政府介入이 例外的으로 市場競爭을 改善하는 효과를 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東아시아 ‘奇蹟’의 원인에 관하여는 政府의 役割을 높이 사는 입장이다. Rodrik流의 修正主義는 政府가 補助金 및 稅制 誘因 제공, 公共投資 등 市場介入을 통해 소위 調整失敗를 타개하였던 것이 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주된 原因이었다고 주장한다.

세 가지 流의 修正主義는 각각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만 모두 資源配分에 대한 政府의 介入이 成長을 加速시켰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見解는, 論理的으로도 그리고 적어도 한국의 成長經驗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Ⅱ章 4節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1960년대의 輸出促進政策은 1950년대의 保護主義 施策들이 殘存했기 때문에 필요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옳고, 1970년대의 重化學工業政策은 重化學工業에서는 過剩投資와 稼動率 하락을 가져왔고 輕工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리고 輸出을 實質基準으로 감소시킴으로써 經濟成長을 후퇴시켰다.

理論적으로 보더라도, Ⅲ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世界市場 價格이 不變이면 無限勞動供給의 與件이 存在하는 한, 政府支援 없이 比較優位 1位 財貨의 生産과 輸出을 위한 投資를 지속할 誘因이 존재함을 보았다. 이는 世界市場이 클수록 無限勞動供給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開途國의 工業化 速度 및 經濟成長은 더 빠를 것이라는

假說을 제기한다.

IV章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19개국의 成長經驗에 관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回歸分析의 방법으로 이 假說을 檢證하여보았다. 그 결과, 각국의 工業化 初期에 世界市場 規模가 클수록 工業化 所要期間이 짧아지거나 成長率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推定結果는 또한 世界市場의 規模가 항상 國際分業을 制約하는 要因으로 작용하여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이 반대되는 實證이 나타나기 전에는, 世界市場 規模가 커졌다는 것이 각국의 工業化 速度가 점점 더 빨라져온 주된 原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과 <표 5>를 통해 살펴본 첫째 推定式의 推定結果에 따르면, 世界市場 規模의 영향을 감안할 때, 東아시아의 成長經驗을 ‘奇蹟’이라 부를 만한 이유가 없다. 이같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成長經驗을 再解釋하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資源配分에 관한 政府介入이 없었더라도 高速成長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1970년대에는 政府介入이 없었더라도 우리 經濟가 이룬 成果보다 더 빠른 成長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假說과 경쟁하는 假說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앞선 나라가 開發한 科學技術을 다시 새로 開發할 필요가 없다는 後發開途國으로서의 利點이 成長率 加速의 原因이라는 假說이다. 그런데 이 글의 假說이 옳지 않고 競爭假說이 옳다면, 이는 같은 量의 資源에서 더 많은 產出을 얻도록 하는 높은 效率性만이 成長率을 加速하는 原因이라는 것이므로 新興工業國의 開發經驗은 先進國의 經驗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III章 3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國際分業을 活用함으로써 工業化의 길을 걸은 新興工業國의 成長은 工業化 初期의 勞動集約的 財貨의 輸出, 産業構造의 不均衡, 經常收支赤字 등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 特徵이란 거대한 世界市場을 活用하였다는 사실로부터 演繹된 것이고 實證分析을

거치지 않은 채이나, 그것이 新興工業國의 一般的인 경험임에 비추어 이 글의 假說의 妥當性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상의 비교적 엄밀한 論理上의 문제를 떠나 政策的 示唆에 관해 推論的이고 印象的인 논의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의 假說이 옳다는 前提 아래 다시 살펴보면 [그림 6]을 보지 않더라도 [그림 1]이나 [그림 5]에는 이미 그 假說의 매우 분명한 實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비교적 自明하다고 할 수 있는 假說이 그간 注意를 받지 못한 반면 政府介入이 高速成長의 原因이라는 修正主義 假說은 많은 學者 및 非專門人에 의해 說得力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東아시아 奇蹟'의 이유를 아시아의인 것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西歐 先進國과 다른, 아시아의인 독특한 무엇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한 것이다.

歐美의 市場經濟와 그 制度的 기반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한 것인데 일본과 아시아의 新興工業國들은 그러한 기반이 없는 한편 民間과의 關係에서 政府가 전통적으로 우월적인 혹은 더 힘있는 地位에 있었기 때문에, 經濟發展過程에서 政府의 役割이 家父長的이었고 民間部門에 대해 指導的이었다. 修正主義者들은 이러한 아시아적 특성을 근거로 市場이나 國際分業보다는 政府의 市場介入이 東아시아 奇蹟의 原因이라는 假說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글의 假說이 옳다는 觀點에서 보면, 政府의 市場介入을 허용하게 된 社會的 與件이라고 볼 수 있는 아시아의 權威主義的 社會體制는 高速成長의 原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이 地域의 經濟發展을 20世紀 後半까지 遲延시킨 要因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글의 假說은 東아시아 奇蹟은 아시아의 現象일 뿐 아니라 20世紀 後半의 同時代的 現象이라는 點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그 原

因으로 [그림 1]에서 보듯이 先進國이 工業化하던 때에 비해 100배 가까이 커진 世界市場의 規模에 注目한 것이다. 이 假說은 新興工業國 成長에 관한 新古典 經濟學의 설명이 안고 있는 弱點을 補充한다고 할 수 있다. 新古典 經濟學은 ‘對外指向’ 成長戰略이 成功의 原因이라고 지적하고는 있으나, 先進國의 경험에 비해 東아시아 新興工業國의 工業化가 몇배 더 빠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뚜렷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글의 假說은, 그 이유가 對外指向 政策의 客體인 世界市場 規模가 커졌다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史上 類例가 드물게 빠른 우리 經濟의 成長過程에서 政府의 보이는 손이 이리저리 資源配分에 介入하였었으며, 이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의 經濟成長이 ‘政府主導型’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理論的으로, 實證的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經濟는 政府主導型이었으나 高速成長은 政府主導型이었다 하기 어렵다. 政府가 아니면 아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이 있다. 國防, 法의 執行, 公共財의 供給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의 論理나 實證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같은 政府 本然의 役割에 관해서가 아니라 市場의 資源配分機能에 대한 介入이 高速成長의 原因이었다는 견해에 관해서이다. 우리 政府의 寄與는 1960년대초 世界市場이 제공하는 機會에 企業人들의 注意를 불러일으켰던 점에서 인정받을만하고, 政治的 安定 제공, 巨視經濟的 安定의 維持, 원貨의 過大 혹은 過小評價 防止, 國內의 광범위한 反對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輸入自由化 등등의 努力에서 인정받을만하다. 市場介入에 관하여는, 政府가 1970년대 重化學工業政策과 같은 產業育成政策을 썼다는 데 寄與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政策이 經濟實績을 떨어뜨리자 그를 認知하고 곧 中斷하였던 柔軟性에 점수를 주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經濟企劃院, 「綜合安定化 施策」, 『開發年代의 經濟政策: 經濟企劃院 20年史』, 三星印刷株式會社, 1982.

金光錫, 래리 E.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9, 1976.

俞正鎬, 「韓國輸出의 市場占有率分析: 對美·日·餘他 OECD 輸出實績을 중심으로」, 『韓國開發研究』, 1991 겨울호.

俞正鎬 外,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韓國開發研究院, 1993.

韓國銀行, 『경제통계연보』, 각호.

Amsden, Alice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Baldwin, Richard E. and Elena Seghezza, "Testing for 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 NBER Working Paper 5416, Jan. 1996.

Bradford, Colin, Jr., *From Trade-Driven Growth to Growth-Driven Trade: Reappraising the East Asian Development Experience*, OECD, Paris, 1994.

Bureau of the Census, U. 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4*, Taiwan, 1984.

- Fukuda, Shin-ichi, and Hideki Toya, "Conditional Convergence in East Asian Countries: The Role of Exports for Economic Growth," in T. Ito and A. Krueger(eds.), *Growth Theories in Light of the East Asian Exper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95.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various issues.
- Japan Statistical Association, *Historical Statistics of Japan*, Vol. 1, Tokyo: Japan Statistical Association, 1987.
- Kim, Kihwan and Danny M. Leipziger, *Korea: A Case of Government-Led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3.
- Krueger, Anne O., "Policy Lessons from Development Experi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Behrman and Srinivasan(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Amsterdam: Elsevier, 1995.
- Krugman, Paul R., "Targeted Industrial Policies: Theory and Evidence," in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Industrial Change and Public Policy*, 1983.
- Kuznets, Simon,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Lewis, W. Arthur,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r," *The Manchester School*, Vol. 22, No. 2, 1954.
- Maddison, A.,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_\_\_\_\_,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Paris: OECD,



1995.

Mitchell, B. R., *European Historical Statistics 1750-1975*,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0.

———, *International Historical Statistics: The Americas and Australia*,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3.

O'Rourke, Kevin and Jeffrey Williamson, "Open Economy Forces and Late 19th Century Scandinavian Catch-up," NBER Working Paper No. 5112, May 1995.

Page, John, "The East Asian Miracle: Four Lessons for Development Policy," *NBER Macroeconomics Annual*, MIT Press: Cambridge, 1994.

Rodrik, Dani, "Trade and Industrial Policy Reform," in Behrman and Srinivasan(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Amsterdam: Elsevier, 1995a.

———,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Rich," *Economic Policy*, 1995b.

Romer, Paul M., "Why, indeed, in America? Theory, History, and the Origins of Modern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5443.

Rybczynski, T. M., "Factor Endowments and Relative Commodity Prices," *Economica*, Nov. 1955.

Samuelson, Paul A., "International Trade and Equalization of Factor Prices," *Economic Journal*, June 1948.

———, "International Factor Price Equalization Once Again," *Economic Journal*, June 1949.

Smith, Adam, *The Wealth of Nations*, ed. by E. Cannan, New York: Modern Library, 1937.

Westphal, Larry E. and Kwang-suk Kim, "Korea," in Balassa et al. *Development Strategies in Semi-Industrial Countr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Yoo, Jungho, Appendix to Professor Robert E. Baldwin's article, "Determinant of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1979.

## 附 錄

本文 IV章의 實證分析은 <표 2>의 資料에 기초한 것인데, 여기서는 <표 2>의 資料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 1. 工業化의 始終年度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農林水産部門에 종사하는 勞動人力의 比重이 50%에서 20%로 하락하는 現象을 ‘工業化’의 操作的 定義로 삼았는데, 實證分析을 위해서는 實證分析에 포함된 나라들이 어느 年度에 工業化를 시작해서 어느 年度에 끝났다고 볼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産業別 勞動人力에 관한 統計가 매년 있다면 이를 쉽게 정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련 통계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통계에 기초하여 工業化 始終年度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統計值를 얻을 수 있는 區間 동안 勞動人力의 比重이 每年 똑같은 %포인트만큼 변하였다고 가정하는 線型延長(linear extrapolation)의 방법을 썼다.

예컨대, 벨기에의 경우 農林水産에 종사하는 人力의 比重이 1846년의 50.9%에서 1856년에는 46.8%로 10년동안 4.1%포인트 하락하였는데 그 동안 매년 0.41%씩 하락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벨기에에서 이 比重이 50%였던 年度는 <표 2>에 나타

나 있는 것과 같이 1849년이라고 본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이처럼 그 工業化의 시작연도가 속해 있을 어느 區間의 시작연도와 끝연도의 比重을 알 수 있었으나,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農林水産 종사자 비중은 1849년에 이미 44.1%였고 1859년에는 37.5%였다. 이러한 경우 이 10년동안 6.6%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위의 추정방법은 1849~1859년 사이에 매년 0.66%포인트씩 하락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인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849년 이전에도 그 比重이 매년 0.66%포인트씩 하락해왔다고 假定을 연장하여 農林水産 종사자의 비중이 50%였던 연도는 1840년이었다고 추측하였다. 工業化의 끝연도에 관하여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19개국 모두에 관해서 그 연도가 속해 있을 어느 區間의 시작연도와 끝연도의 農林水産 종사자의 比重을 알 수 있었다.

#### 가. 대부분의 西歐 先進國들

다음의 西歐 여러 나라의 경우에는 工業化 始終年度 추측에 필요한 統計를 *European Historical Statistics 1750-1975*(Mitchell, 1980)에서 얻었는데, 男女別로 나타나 있는 각국의 ‘産業別 經濟活動人口(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Major Industrial Groups)’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체 勞動人力의 産業別 비중을 구하였다.

<네덜란드>

勞動人力의 產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49 | 44.1 | 0.2 | 19.1 |
| 1859 | 37.5 | 0.2 | 20.7 |
| 1930 | 20.6 | 1.6 | 26.9 |
| 1947 | 19.3 | 1.4 | 28.0 |

<덴마크>

勞動人力의 產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50 | 49.4 | na  | na   |
| 1860 | 48.6 | na  | na   |
| 1950 | 25.1 | 0.2 | 26.7 |
| 1960 | 17.5 | 0.2 | 29.1 |

<벨기에>

勞動人力의 產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46 | 50.9 | 2.4 | 31.8 |
| 1856 | 46.8 | 3.2 | 31.5 |
| 1920 | 21.8 | 7.1 | 34.8 |
| 1930 | 17.3 | 5.5 | 35.7 |

<프랑스>

勞動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56 | 51.7 | 1.4 | 21.9 |
| 1901 | 41.4 | 1.4 | 25.2 |
| 1954 | 27.0 | 1.9 | 27.2 |
| 1962 | 20.0 | 1.6 | 28.2 |

<독 일>

勞動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82 | 47.5 | 3.4 | 27.2 |
| 1933 | 29.0 | 3.3 | 30.8 |
| 1946 | 29.2 | 3.4 | 29.0 |
| 1950 | 18.7 | 3.2 | 32.9 |

<노르웨이>

勞動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91 | 49.6 | na  | 22.9 |
| 1900 | 40.8 | na  | 27.6 |
| 1950 | 25.9 | 0.6 | 26.5 |
| 1960 | 19.5 | 0.6 | 26.4 |

주 : 1891년 제조업은 가스, 수도, 전기  
위생서비스업 포함.

<스웨덴>

勞働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00 | 53.5 | na  | na   |
| 1910 | 46.9 | 0.6 | na   |
| 1950 | 20.4 | 0.5 | 32.4 |
| 1960 | 13.8 | 0.6 | 35.3 |

<이탈리아>

勞働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21 | 56.1 | 0.5 | 24.0 |
| 1936 | 48.2 | 0.7 | 22.1 |
| 1961 | 29.0 | na  | 40.4 |
| 1971 | 16.4 | na  | na   |

주 : 1921년 제조업은 가스, 수도, 전기, 위생서비스업 포함.

나. 기타 유럽 國家들

다음의 네 나라의 경우에는 시작연도를 추측하는 데에 필요한 統計는 *European Historical Statistics 1750-1975* (Mitchell, 1980)에서 얻었고, 끝연도에 관한 통계는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ILO), 각호에서 얻었다.

<아일랜드>

노동인력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61 | 57.0 | 0.3 | 15.6 |
| 1871 | 40.7 | 0.4 | 19.5 |
| 1978 | 22.2 | 1.0 | 21.1 |
| 1979 | 19.5 | 1.1 | 21.3 |

<스페인>

노동인력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40 | 51.9 | 1.1 | 18.9 |
| 1950 | 48.8 | 1.6 | 18.2 |
| 1978 | 20.6 | 0.8 | 25.9 |
| 1979 | 19.8 | 0.8 | 25.8 |

<핀란드>

노동인력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40 | 57.4 | 0.1 | 16.2 |
| 1950 | 45.9 | 0.3 | 21.2 |
| 1971 | 21.1 | -   | 26.4 |
| 1972 | 18.8 | -   | 26.9 |

주 : 1971, 72년의 제조업은 광업, 전기  
가스, 수도 포함.



〈포르투갈〉

勞働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50 | 50.9 | 0.8 | 20.2 |
| 1960 | 46.1 | 0.9 | 22.7 |
| 1988 | 20.8 | 0.6 | 24.7 |
| 1989 | 19.0 | 0.7 | 24.9 |

다. 캐나다 및 베네수엘라

이 두 나라의 경우에는 *International Historical Statistics: The Americas and Australia*(Mitchell, 1983)의 “産業別 經濟活動人口(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Major Industrial Groups)”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체 勞働人力의 産業別 比重을 얻었다.

〈캐나다〉

勞働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91 | 48.3 | 0.9 | 14.8 |
| 1856 | 42.6 | 1.6 | 16.8 |
| 1941 | 27.5 | 2.1 | 22.2 |
| 1930 | 19.3 | 2.0 | 27.2 |

## 〈베네수엘라〉

勞働人力の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41 | 49.3 | 1.8 | 13.0 |
| 1950 | 44.0 | 2.8 | 11.1 |
| 1971 | 20.5 | 1.3 | 14.7 |

## 라. 美 國

미국의 경우 산업별 노동인력의 통계를 Bureau of the Census, U.S.(1973, p. 138)의 表 Series D 152-166: Industrial Distribution of Gainful Workers: 1820 to 1940에서 얻었다. 이 자료는, 'gainful workers'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직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쓰인 것으로 고용상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勞働人力の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880 | 50.1 | 1.8 | 18.2 |
| 1890 | 42.8 | 2.0 | 20.0 |
| 1930 | 21.7 | 2.4 | 22.7 |
| 1940 | 17.1 | 2.1 | 22.4 |

## 마. 일 본

일본의 경우에는 *Historical Statistics of Japan*, Vol. 1(Japan Statistical Association, 1987)의 Table 3-7: Employed Persons 15 Years Old and Over by Industry (Major Group) (1920-

1985)에서 얻은 통계에 기초하여 산업별 勞動人力의 比重에 관한 아래 表를 얻었다.

勞動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20 | 53.8 | 1.6 | 16.4 |
| 1930 | 49.7 | 1.1 | 15.9 |
| 1960 | 32.6 | 1.2 | 21.9 |
| 1970 | 19.3 | 0.4 | 26.2 |

바. 대 만

대만의 경우에는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4*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1984)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었다.

勞動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60 | 50.2 | 0.2 | 14.8 |
| 1961 | 49.8 | 2.4 | 15.0 |
| 1979 | 21.0 | 0.1 | 32.3 |
| 1980 | 19.5 | 0.1 | 32.5 |

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호(ILO)에서 다음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시작연도를 짐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통계는:

## 말레이시아의 經濟活動人口

(단위: 名)

| 연도         | 전산업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사바, 1970   | 212,714   | 125,777   | 889    | 7,079   |
| 사라와크, 1970 | 371,655   | 247,561   | 1,112  | 18,318  |
| 西말레이시아     |           |           |        |         |
| 1967~68    | 2,480,433 | 1,219,453 | 72,028 | 214,775 |
| 1970       | 2,870,949 | 1,224,575 | 55,276 | 251,939 |

그러므로 말레이시아 전체의 경제활동인구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연도          | 전산업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말레이시아, 1968 | 3,064,802 | 1,592,791(52.0) | 74,029(2.4) | 240,172(7.8) |
| 말레이시아, 1970 | 3,455,318 | 1,597,913(46.2) | 57,277(1.7) | 277,336(8.0) |

이에 기초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우 농업부문 인력 비중이 50% 되는 해는 1968년과 1970년의 중간연도인 1969년이라고 추정하였다.

끝연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같은 자료, ILO(1995)에서 얻은 다음의 통계에 의존하였다.

## 勞動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85 | 30.4 | 0.8 | 15.0 |
| 1988 | 30.6 | 0.5 | 16.0 |
| 1990 | 26.0 | 0.6 | 19.9 |
| 1992 | 21.8 | 0.5 | 23.3 |
| 1993 | 21.1 | 0.5 | 23.4 |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건대, 말레이시아 농림수산부문의 노동인력 비중이 1985년 이후 상승하였다가 199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등 추세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1992년 이후 그 하락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기초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농림수산부문의 노동인력 비중이 20% 이하가 되는 연도는 1995년이라고 보았다.

### 아. 한 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 각호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었다.

勞動人力의 産業別 比重

| 연도   | 농림수산 | 광업  | 제조업  |
|------|------|-----|------|
| 1970 | 50.4 | 1.1 | 13.2 |
| 1971 | 48.4 | 0.9 | 13.3 |
| 1988 | 20.7 | 0.9 | 27.7 |
| 1989 | 19.6 | 0.5 | 27.8 |

## 2. 世界總輸出

1990년 불변가격 世界總輸出은 거의 모두 Maddison(1995)에서 얻거나 그에 기초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나 I章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1820년 이후 각 연도마다 모두 世界總輸出의 추정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線型延長의 방법으로 推定値를 구하여 實證分析에 사용하였다. 예컨대, 2次大戰을 전후하여 1938년과 1950년 사이 12년간의 추정치가 없으므로 이 글의 실증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단순히 그 12년동안 세계총수출이

매년 같은 量만큼 증가하였다고 가정하고 線型延長의 方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940년도의 세계총수출은, 우선 1950년과 1938년 두 연도의 세계총수출의 차이를 12로 나누고, 그 몫을 2로 곱한 다음 그 결과를 1938년의 세계총수출에 더함으로써 추정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네덜란드(1840), 덴마크(1843), 벨기에(1849), 프랑스(1858), 아일랜드(1865), 미국(1880), 베네수엘라(1940), 스페인(1946), 핀란드(1946)의 工業化 시작연도 그리고 독일(1949)의 工業化 終연도의 세계총수출을 추정하였다.

### 3. 國內總生産 및 人口

각국의 公業化 기간 동안의 平均성장률( $RY$ )을 구하는 데 필요한 불변가격 國內總生産(GDP)과 人口도 대부분은 Maddison(1995)에서 얻었으나, 몇몇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계총수출과 같이 線型延長法으로 추정하였다. 네덜란드(1840), 덴마크(1843), 벨기에(1849), 프랑스(1858), 아일랜드(1865)의 GDP와 人口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관해서는 Maddison(1995)에서 필요한 통계를 얻을 수 없었는데,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GDP 및 人口에 관한 통계를 각각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4*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1995)의 경우에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에 의존하였는데, 1994년의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라는 제약이 있었고, 人口는 1969년부터 不變價格 GDP는 1970년부터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成長率( $RY$ )은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成長率을 實證分析에 사용하였다.

## ■ 論 評

李 鍾 和

(高麗大學校)

과거 30년간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가 高度成長을 이룩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을 가져온 要因들은 무엇이며, 특히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政府의 役割을 강조하는 최근의 여러 견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고도성장을 가져온 요인을 實證分析을 통해 찾고 있는 이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 하겠다.

또 최근 우리 경제가 開放化, 自律化의 흐름 속에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적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논문이 갖는 정책적 기여도 역시 매우 높다 하겠다. 특히 막연한 이론적 논거에 의해 政府의 市場介入이 정당화될 수 없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開放과 더불어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하겠다.

이 논문의 핵심내용은 동아시아 新興工業國(NICs)의 고도성장이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커진 세계시장과의 활발한 交易에 의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고도성장의 원인을 정부의 시장개입에서 찾는 소위 修正主義者들(revisionists)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다.

일견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新古典學派의 見解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긴 하나, 본 논문은 그 분석이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假說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구한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춘 훌륭한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Amsden의 後發工業化論, World Bank의 市場順應的 介入論(market friendly intervention), Rodrik의 投資의 調整失敗(coordination failure)理論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의 견해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또 실증분석을 위해 세계각국의 과거 19세기 이후의 工業化에 관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

논문의 방대한 작업과 여러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굳이 지적하자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工業化와 高度成長의 원인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비교 대상국가를 이미 公業화를 이룩한 19개 國家로 한정된 점이라 하겠다.

이는 물론 이 논문에서 입증하려고 하는 假說이, 과거 先進國들에 비하여 더 커진 世界 交易市場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公業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公業화를 이룩하지 못한 모든 後進國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연구과제인, 어떻게 이들 국가들이 남미 또는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후진국들에 비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修正主義者의 대표적인 견해가 이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輸出産業을 지원하고 미래의 수출 주력상품을 幼稚産業단계에서 보호·육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임을 감안하면, 과연 확대된 세계시장규모의 이점



을 똑같이 갖고서도 과거 30년간 여러 국가들간에 成長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하여야 할 중요한 課題이다. 이 점은 결국 앞으로 세계시장의 규모만 계속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이 별다른 우리의 노력 없이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도 연결된다 하겠다.

그외에 지엽적인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에서 수출과 투자간의 因果關係에 관한 설명, 공업화의 기간을 農林水産業 종사자 비율이 50%에서 20%로 하락한 기간으로 임의로 정한 점에 대한 본문의 설명은 論評者로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를 방대한 자료로 분석한 노력의 결과로서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 韓 震 熙

(本院 專門研究員)

이 논문은 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업화 속도 및 그 기간의 성장률이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매우 빨랐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로 볼 수 있으며, 그 해답으로서 공업화 초기의 세계시장규모가 공업화의 속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공업국가들(NICs)의 빠른 성장의 원인에 대하여 그동안 주로 개발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고, 최근에는 내생적 경제성장론에 의한 경제성장이론의 부활과 더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동아시아의 기적'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나, 개발경제학자들의 초창기 주제인 경제성장

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두 가지의 큰 견해—즉 해외시장의 역할에 의하여 대표되는 신고전학파적 견해와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하여 대표되는 수정주의적인 견해—에 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각 주장의 상이한 이론적 배경뿐 아니라 과연 이들 국가의 대외거래정책이 개방적인 것이었는가 아닌가, 그리고 이들 정부가 시장기능을 억제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시장기능에 우호적인 것이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조차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저자가 신고전파적인 견해와 수정주의적인 견해를 비교·평가한 부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논문은,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외정책은 개방적이었으나 시장개입적인(특히 산업간 자원배분에) 정부를 가졌었다는 시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과연 동아시아의 빠른 성장의 원인이 개방적인 대외정책에 있었는가, 아니면 시장개입적인 정부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왜 공업화한 국가들 중 공업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근에 공업화한 국가일수록 짧았는가 하는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는 1990년대초 시점에서 저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공업화한 19개국이 공업화에 소요된 기간이 공업화 초기의 세계시장규모가 클수록 단축되었다는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그림 5 및 그림 6). 저자의 이와 같은 예리한 관찰은 기존의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매우 유익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의 원인이 정부의 투자에 대한 조정기능(investment coordination)에 있다는 Rodrik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수출의 증대가 수입이나 투자

에 선행하였음을 지적하며 반론을 제기한 점도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에서 더 나아가 저자는 세계시장이 한 경제의 공업화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이론적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즉 저자는 무한탄력적인 노동공급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경제가 국제무역에 참가할 때 세계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자국에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보다 특화하여 공업화를 수월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sup>1)</sup> 여기서 저자는 해외시장이 한 국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신고전파적인 입장에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전통적 신고전파적인 설명방법과 다름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즉 전통적 신고전파적 개발경제학자들은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를 그들 이론에 기초하여 비교우위에 의한 자원재배분효과로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에 따른 효율성 제고, 신기술이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나 상품의 수입 혹은 수출활동에 따른 수입자로부터의 기술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일회적(one-time)이거나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저자는 국제무역에의 참여 그 자체보다는 ‘세계시장의 크기’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데, 세계시장의 크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경로는 새로운 것으로서 주목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더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이 논문의 이론적인 기여도도 지금보다 분명해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독창성 및 실증분석 부분의 기여도가 뛰어나

1) 자세한 이론적인 설명은 원문을 참조할 것.

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먼저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세계시장의 규모와 공업화 속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저자의 설명이외에 다른 가설들과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왜 다른 가설보다 저자의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자가 지적하듯이, 영국의 산업혁명기의 공업화 속도에 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업화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세계시장의 규모의 차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공업화기에 비하여 동아시아국의 공업화기에 각 나라의 외부에 존재하는 활용가능한 지식의 양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즉 동아시아국은 후발국으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 국가였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저자의 실증분석결과는 허위상관관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가설로 과거에 공업화한 국가와 최근에 공업화한 국가간에 개방의 정도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진전도와 같은 세계시장과의 교류방식의 차이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가설들하에서 사용되었을 변수들을 사용하여 각 국가간의 차이를 통제하고서도 저자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면 그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유의성이 높을 것이다.

두번째로, 이 논문은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들만을 표본으로 삼고 있어 공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왜 주어진 세계시장이 나라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즉 무한탄력적 노동공급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세계시장의 크기에 비하여 충분히 작은 나라들 중에서 공업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왜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이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애초부터 공업화에 성공한 나라를 중심으로 공업화 속도를 관찰한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세계시장의 규모가 공업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이 정부의 시장개입보다는 세계시장과의 교류에 있었다면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에 개입하는 일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이 논문의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 논문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시장과 ‘어떻게’ 교류하였는가가 아니라 세계시장의 규모와 공업화 속도와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계시장의 ‘규모’가 공업화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세계시장의 크기가 공업화의 속도 혹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문제가 안 되는 신고전학파적 가정들에서 벗어나야 하나, 이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과는 괴리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기능에 대한 개입의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